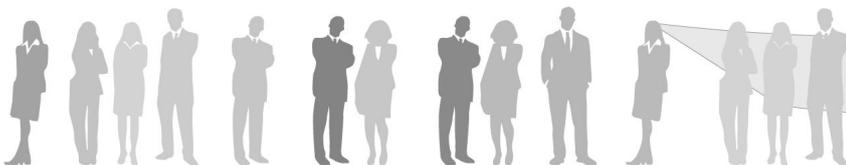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and Their Achievements
on the Incheon Self-Support Project

권 현 진 · 안 기 덕



비전창조 정책디자인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권현진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 안기덕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책임연구원
-
-

서 문

인천의 지역자활사업은 이제 15년의 역사, 그리고 제도화 이후 1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자활로 유도하고자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일반 저소득시민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사업내용에서도 사회서비스사업, 성과관리형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인천의 자활공동체 수는 지난 10년간 약 5.6배, 자활근로사업 수는 약 4.1배 성장하였고, 사회서비스사업은 2007년에 비하여 약 9배가 증가된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역자활사업의 모태가 되는 생산공동체가 있었던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역사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온 뿌리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자활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인천의 지역자활사업 내용의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9개 군·구에 설립되어 있는 11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해 온 지역자활사업의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연구결과가 인천 지역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인천 지역자활사업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0. 12.

인천발전연구원장 기민배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역자활사업은 1996년 5개의 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24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62,000여 명이 참여해 경영자립에 성공한 자활공동체가 1,164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 인천 지역에서도 2001년 7개였던 지역자활센터가 2010년 현재 11개로 늘어났으며 자활공동체 사업수도 10개에서 56개로 대폭 증가 하였다. 특히 인천은 지역자활사업의 모태가 되는 생산공동체가 있었던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역사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 또한 자활사업이 제도화되고 난 이후 사업초기부터 공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의 광역자활공동체를 출범시키기도 함. 이러한 인천의 지역자활사업은 이제 15년의 역사, 제도화 이후 1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업내용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기에 적절한 시기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의 9개 군·구에 설립되어 있는 11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해온 지역자활사업을 중심으로 10년의 성과와 더불어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과적인 지역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음.

□ 인천 지역자활사업 현황과 성과논쟁

-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자립할수 있도록 단계별로 디딤돌 사업,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직업알선, 창업지원프로그램등이 있으나, 참여자들의 가장 많은 비중은 자활근로에 집중되어 있음.
- 인천 지역자활사업은 1996년 동구자활후견기관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 11개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자활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인천광역시에서는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원-스타트사업 실시, 자활사업지원조례제정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은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음. 자활사업의 성과를 탈수급율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두게 되면 매우 미미한 성과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됨.
- 이러한 미미한 사업성과의 근본적 원인은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연계되어 있어 자활사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는 주장이 많으며,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질적 측면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실제로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자립의지, 생활태도 변화와 같은 주관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는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음.

□ 인천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인식

- 인천지역의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463명과 종사자 122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참여자 조사는 463명 중 여성 응답자가 75.8%로 다수이고, 이중에서 여성 한부모는 전체의 43.7%로 조사되었으며, 수급여부에 있어서는 조건부수급자가 64.5%, 일반수급자는 4.2%, 자활특례자는 8.0%, 차상위계층은 18.8%이며, 수입과 주거상태 모두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었음.
-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가 47.0%로 가장 다수였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29.7%, 자활공동체는 12.5%, 사회서비스마우처사업은 8.8%, 기타 2.0%였으며, 자활사업 참여동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유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근로활동 참여라고 응답하고 있음.
- 자활사업이 자립과 자활에는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48%), 참여하기 어려운 점은 수입이 적은것이 1순위 응답이며,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일해

서 버는 돈의 소중함,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인식 또한 하고 있음.

- 종사자 조사는 122명의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이 응답하였고, 이중 여성이 63.1%로 남성보다 많음. 학력은 대졸이상이 89.3%로 대체로 고학력이지만 월수입에 있어서는 160만원 이하가 73.7%로 낮은 수준임.
-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 41%, 비정규직 59%로 불안정한 고용에 처한 비율이 높고, 종사기간에 있어서도 3년 이하가 65.3%로 낮아 이직률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음. 업무만족 비율은 58.2%이지만, 급여만족 비율은 25.5%로 업무만족도에 비하여 급여만족도는 낮음.
- 종사자들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사회적 인식, 사·군·구의 관심과 지원 등은 낮은 수준으로 인식함.

□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

-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는 양적측면의 성과와 질적측면의 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적측면의 성과는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양적인 성장, 그리고 자활성공률로 구분됨.
- 자활사업의 양적인 성장은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의 약 10년간의 각 사업의 성장추이로서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들의 운영현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자활공동체는 사업수는 2001년-2009년까지 5.6배, 참여인원은 8.8배, 매출액은 105.8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자활근로 역시 사업수는 약4.1배, 참여자는 4.2배, 매출액 또한 8.6배 늘었음. 사회서비스사업은 사업수는 6.6배 증가, 참여인원은 6.2배 증가, 매출액은 2007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약9배의 성장세를 보임.
- 지역자활사업의 추진기반인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과 비교해보면, 센터수는 7개에서 11개로 확대되었고, 종사자수는 약 2.98배, 센터 예산은 1.72배 늘

있음.

-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자활성공률은 8개 지역자활센터의 최근 5년간의 자활성공률을 비교해본 결과, 2005년에는 평균 8%의 자활성공률에서 2009년에는 28%의 자활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자활사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과창출에도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음.
-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질적 측면의 성과는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의 인식조사 결과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의 결과에서 도출하였고,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질적 측면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음. 첫째는 자활사업의 만족 및 도움, 둘째는 자활의욕 고취, 셋째는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의 긍정적 변화임.

□ 정책건의

-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개선방안은 크게 지역자활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지역자활사업의 추진기관별 역할 재정립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음.
- 지역자활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지역자활사업을 자립촉진이 가능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업내용으로 개편해야 함.
 -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이 가능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재가 모두 필요함.
 - 자활사례관리능력 증진 요구
 - 지역자활사업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병행
 - 지역자활사업 성과관리 개선
 - 사회적기업과의 상생방안 모색
- 지역자활사업 추진기관별 역할 재정립
 - 지역자활센터 :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교육과 사례관리 강화, 지역사회네트워크 확대방안 모색, 운영지원위원회 활성화 등.
 -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 공동사업단, 광역공동체, 네트워크회의와 같은 공동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사

업 발굴

- 인천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개발과 자원구축 및 연계, 인천광역시 차원의 생산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활시장 조직화, 자활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 등.
- 인천광역시와 군·구 : 자활기금 확충 및 적극적 활용 지원, 원- 스타트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등에 대한 평가 및 지속지원, 자활사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형성 노력
- 중앙정부와 중앙지원기관 : 자활사업의 참여자를 조건부수급자에서 일반 저소득시민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추진 필요, 지역자활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정책과 기타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자활사업 내용 및 자활사업 성과	9
제1절 자활사업의 태동과 변화	9
제2절 자활사업의 내용	11
1. 자활사업 목적	11
2. 자활사업 대상	12
3. 자활사업 프로그램	15
4. 자활사업 추진기반	20
제3절 자활사업 성과논쟁	24
1. 선행연구 검토	24
2. 양적 측면의 성과	30
3. 질적 측면의 성과	31
제4절 소결	33
제3장 인천 지역자활사업 현황	37
제1절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역사	37
1. 태동기	37
2. 형성기	38
3. 성장기	39

제2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수행기관	41
1.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41
2. 인천광역자활센터	42
3. 지역자활센터	44
제3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내용	45
1.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	45
2. 인천광역자활센터 사업	49
3. 11개 지역자활센터 사업	50
4.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지원	58
제4절 소결	61
제4장 인천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인식	65
제1절 조사개요	65
제2절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조사결과	66
1. 일반적 사항	66
2. 자활사업 참여현황	71
3. 근로조건 및 기관만족도	78
4. 참여자 인식 및 복지욕구	81
제3절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조사결과	84
1. 일반적 사항	84
2. 직무관련 응답 결과	87
3.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94
제4절 소결	97
제5장 인천 지역자활사업 성과	101
제1절 양적 측면의 성과	101
1.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장	101
2. 자활성공률	106

제2절 질적 측면의 성과	107
1. 자활사업 만족 및 도움정도	108
2. 자활의욕	109
3.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112
제3절 소결	114
제6장 인천 지역자활사업 개선방안	117
제1절 지역자활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17
1. 지역자활사업의 변화에 따른 방안	117
2. 거시정책 변화에 따른 방안	121
제2절 지역자활사업의 추진기관별 역할 재정립	123
1. 군·구 지역자활센터	123
2.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인천광역자활센터	124
3. 인천광역시와 군·구	125
4. 중앙정부와 중앙지원기관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1
[부록1]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135
[부록2]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지	139
[부록3]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설문지	147

- 표 목 차 -

<표 2-1>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14
<표 2-2>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2009. 12. 31. 기준)	16
<표 2-3> 5대 표준화 자활사업 추진현황 (2009.12.31 기준)	18
<표 2-4>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선행연구	29
<표 3-1> 지역자활센터 현황	45
<표 3-2> 광역공동체 및 공동사업단 현황	47
<표 3-3> 네트워크 회의 현황	48
<표 3-4>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50
<표 3-5> 자활근로사업 현황 I	51
<표 3-6> 자활근로사업 현황 II	52
<표 3-7>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I	53
<표 3-8>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II	54
<표 3-9>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III	55
<표 3-10> 사회서비스 및 기타사업 현황	57
<표 3-11> 광역자활센터 지원내역	58
<표 3-12> 지역자활센터 지원내역	59
<표 3-13> 자활사업 지원내역	60
<표 4-1> 참여자 설문조사의 세부내용	65
<표 4-2> 종사자 설문조사의 세부내용	66
<표 4-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7
<표 4-4> 주거지역	68
<표 4-5> 가족 구성	68
<표 4-6>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족 구성비율	69
<표 4-7> 가족 수	70

<표 4-8> 수입가족 유무	70
<표 4-9>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71
<표 4-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71
<표 4-11> 자활사업 참여 전 실업기간	72
<표 4-12> 자활 외 사업 참여 경험	72
<표 4-13> 자활사업 참여 총 기간	72
<표 4-14> 자활사업 참여동기	73
<표 4-15> 연령대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동기	74
<표 4-16> 자활사업 만족도	75
<표 4-17> 자립자활 도움정도	75
<표 4-18>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	76
<표 4-19>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및 자립자활 도움정도	76
<표 4-20> 취업 및 (공동체)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	77
<표 4-21> 한부모·비한부모의 취업 및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 비교	78
<표 4-22> 근로조건 만족정도	78
<표 4-23> 기관운영 만족도	79
<표 4-24> 연령대에 따른 근로조건 및 기관운영 만족도	80
<표 4-25> 자활의욕 정도	81
<표 4-26>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	82
<표 4-27> 연령대에 따른 자활참여 이후 생활변화 및 자활의욕 정도	83
<표 4-28>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순위·2순위	84
<표 4-2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5
<표 4-30> 조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86
<표 4-31> 직무 중요성 정도	87
<표 4-32> 근무연수에 따른 항목별 직무 중요성 정도	88
<표 4-33> 직무수행정도	89
<표 4-34> 근무연수에 따른 항목별 직무수행 정도	90
<표 4-35> 직위 및 급여 만족정도	91

<표 4-36> 급여가 공정한 정도	91
<표 4-37> 업무 만족도	92
<표 4-38> 성별에 따른 직위·급여·업무 만족도	92
<표 4-39> 직무 불만족 요인 1순위, 2순위	93
<표 4-40>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1순위, 2순위	94
<표 4-41> 개선사항 1순위, 2순위	95
<표 4-42> 자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순위, 2순위	95
<표 4-43> 자활사업의 발전정도	96
<표 4-44>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의 발전정도 인식 차이	96
<표 5-1> 2001~2010년 자활공동체 현황	101
<표 5-2> 2001~2010년 자활근로 사업 현황	103
<표 5-3> 2001~2010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04
<표 5-4> 2001~2010년 지역자활센터 현황	105
<표 5-5> 센터별 자활 성공률	106
<표 5-6> 자활의욕정도	110
<표 5-7>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	112

- 그림 목 차 -

<그림 2-1> 자활사업의 참여대상	13
<그림 2-2>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추이	14
<그림 2-3>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15
<그림 3-1>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조직도	42
<그림 3-2> 인천광역자활센터 조직도	43
<그림 4-1> 전체 여성 및 남성 응답자 중 한부모 가정 비율(N=456)	69
<그림 4-2> 자활사업 참여동기	73
<그림 4-3> 기관운영 만족도	79
<그림 4-4>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	82
<그림 4-5> 직무 중요성 정도	87
<그림 4-6> 직무 수행정도	89
<그림 5-1> 2001~2009년 자활공동체 매출액 추이	102
<그림 5-2> 2001~2009년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추이	103
<그림 5-3> 2001~2009년 지역자활센터 예산 추이	104
<그림 5-4> 2001~2009년 사회서비스 매출액 추이	105
<그림 5-5> 센터별 자활 성공률 추이(2005년~2009년)	10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외환 환란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대량 실업과 빈곤층의 증가라는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사상초유의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절대빈곤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자 기존의 시혜적인 공적부조제도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이다(최윤정, 2009).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시된 자활사업은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태동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1996년 5개의 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24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62,000여 명이 참여해 경영자립에 성공한 자활공동체가 1,164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동아일보 2010년 9월 9일자). 인천 역시 2001년 7개였던 지역자활센터가 2010년 현재 11개로 늘어났으며 자활공동체 사업수도 10개에서 56개로 대폭 증가 하였다. 특히 인천은 지역자활사업의 모태가 되는 생산공동체¹⁾가 있었던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역사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또한 자활사업이 제도화되고 난 이후 사업초기부터 공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의 광역자활공동체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천의 자활사업은 이제 15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업내용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자활사업이 제도화 이후 순탄한 과정만을 겪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1) 1990년 부업공동체 두레협업사(송림동 인천사랑방교회), 1995년 봉제협동조합 ‘웃누리’(인천여성노동자회)는 서울 하월곡동 건설일꾼 ‘두레’와 함께 빈민지역 주민들의 생산공동체로서 자활사업의 기원이며 자활사업 제도화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2010).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활사업의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적절한 근로기회를 제공 받고 있는지에 있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자활사업의 성과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의 9개 군·구에 설립되어 있는 11개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해온 ‘지역자활사업’을 중심으로 10년의 성과와 더불어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과적인 지역자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범위는 자활사업 중에서 인천의 9개 군·구²⁾를 중심으로 시행된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한정하며 ‘인천 지역자활사업’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자활사업’으로 통칭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즉시 취업 부적합자 자활사업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즉시취업 적합자에 대한 자활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과 혼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활사업의 전반적 내용과 실행체계로서의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등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옹진군은 제외되었다.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자활사업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역사, 사업내용, 실시현황, 자활사업의 성과논의 등을 검토하였고, 인천 지역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인천광역시자활센터, 11개 지역자활센터의 내부자료,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2) 설문조사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자활사업 참여자는 463명, 지역자활사업 종사자는 122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내용은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현황, 자활의욕, 자활사업 만족도, 사업참여 이후 인식의 변화 등이며, 종사자는 직무중요도, 직무수행정도, 직무 불만족 요인, 교육훈련, 자활사업의 발전정도에 대한 인식 등이다.

3) 면접조사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질적 측면의 성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면접내용은 지역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성과, 참여로 인한 변화 등이다.

4) 자문회의·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자문의견을 반영하였고,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한 ‘인천지역자활사업 10년 기념 토론회’(2010년 10월 13일 개최)에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와 종사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내용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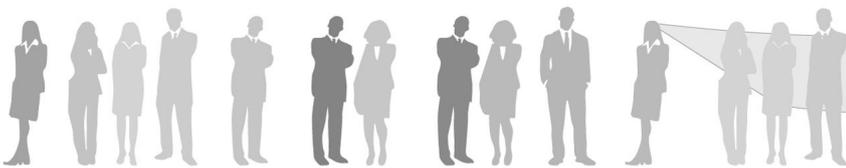
제2장 자활사업 내용 및 자활사업 성과

제1절 자활사업의 태동과 변화

제2절 자활사업 내용

제3절 자활사업 성과논쟁

제4절 소결



제2장 자활사업 내용 및 자활사업 성과

제1절 자활사업의 태동과 변화

자활사업은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역은 2002년 서구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마지막으로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정승인을 받아 자활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초창기였던 1996년에는 불과 5개의 자활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채 출범하였고 이후 1999년까지 진행되었다. 당시 자활지원센터들은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출발하여 빈민운동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민간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시범 사업 초기에는 생산공동체 위주의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그 외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설치한 공동부업장, 일용직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등이 소규모 운영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 자활사업은 특별취로사업, 자활공동체, 생업자금융자,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인천은 인천 동구지역 송림동 ‘나눔의 집’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동구자활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과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책의 방편으로 1998년부터 운영된 공공근로 사업운영에 대한 경험이 인천지역 자활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의 창립과 각 지역본부의 실업대책 사업들(집수리, 간병, 청소, 재활용 등)이 이후 자활후견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자활사업의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 인천 자활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2010).

한편 자활사업의 본격적인 정착은 법제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존재하던 자활사업이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 또한 법 제정을 계기로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복지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인센티브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도화 초기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는 자활사업이 정착기에 들어선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관련 전달체계나 제도가 확장되어 지역자활센터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출범, 광역자활센터의 확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확산, 근로장려세제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규모별 예산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별 지역자활센터들은 정형화된 틀 내에서의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자활복지선진화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기존의 자활정책이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를 인정하고 경쟁을 기조로 한 성과의 촉진을 표명하였다. 즉 취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를 의미한다.

더불어 이 시기는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우선 사회적 기업은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반하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모두 251개이고 이중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61개로 24.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살펴보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서비스 확대 공급의 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활사업은 돌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확대 공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초창기부터 돌봄 영역의 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비중을 두었는데, 이른바 5대 표준화 사업 중 하나가 간병사업이었고, 사실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간병사업의 발전으로 2006년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할사업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8년에는 사회서비스 총괄본부로 개편하

게 되었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0).

이렇듯 자활사업은 초창기 빈민운동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생성되었으며 본격적인 기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이후 자활사업은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 양적인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제2절 자활사업의 내용

1. 자활사업의 목적

이러한 역사적 변화과정을 거친 자활사업이 2010년 현재 어떤 모습으로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자활사업안내’에 의하면 자활사업의 목적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이며,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목적을 통해 자활사업은 ‘지원’과 ‘강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의 취업노력과 함께 자원봉사 등의 공익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측면과 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욕구를 존중하여, 강제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최윤정, 2009).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주요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 자활사업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사업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능력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자이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일정 연령조건을 충족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중인 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004년부터 연령기준을 18세 이상 62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노령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즉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이므로,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의무참여대상이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 부과제외자로, 조건부수급자 중 장애등급 5·6급 장애인,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시험준비생·직업훈련생, 학원수강생, 북한 이탈주민 등을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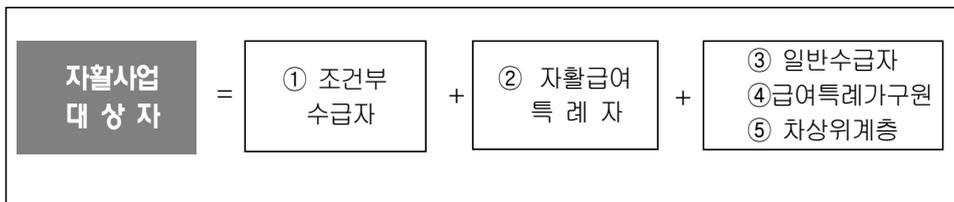
셋째, 자활급여특례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 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를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와는 대조적으로 자활급여특례자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희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규정을 두어, 학교 미진학자, 중퇴자, 가출자 등 미성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근로무능력자이나 사업참여를 인정하되 근로중심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양하고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자활인큐베이팅사업 등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은 자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15~17세의 자에 대하여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0).

이렇듯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나 의무참여는 조건부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부수급자에게는 ‘강제’의 측면이 강하고 그 외 대상자의 경우 ‘지원’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 2-1> 자활사업의 참여대상



※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⑤ ※ 수급자: ①②③ ※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년도 자활사업안내.

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총 참여인원이 2007년 60,025명이었으나 2008년 하락하여 49,830명이었고 다시 2009년 상승해 54,318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2007년도 참여인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실참여 인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3>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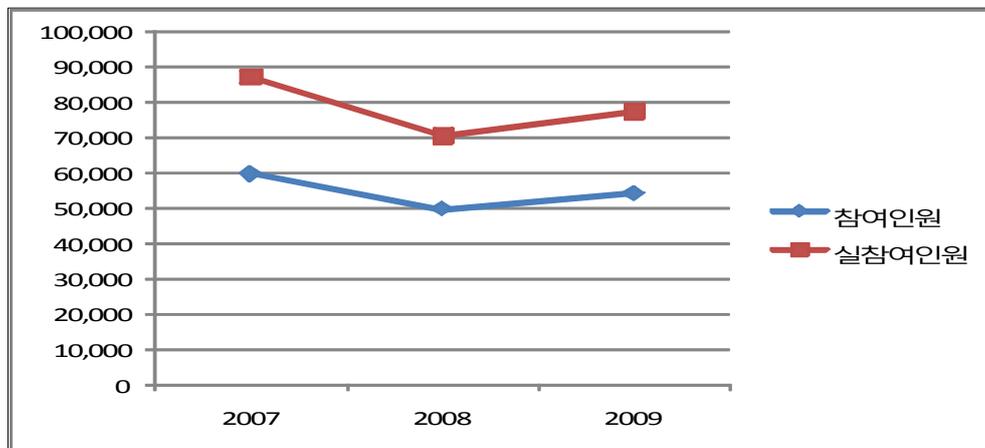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계				차상위 계층
			소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2007	12월말	60,025	41,080	33,612	7,468	18,945
	누 계	87,282	60,258	48,289	11,969	27,024
2008	12월말	49,830	35,213	30,771	4,442	14,617
	누 계	70,489	49,241	42,554	6,687	21,248
2009	12월말	54,318	38,763	35,169	3,594	15,555
	누 계	77,532	55,193	50,193	5,317	22,020

참고: 누계는 자활사업 연간 실 참여인원
 자료: 보건복지부(2009)보건복지백서.

<그림 2-2>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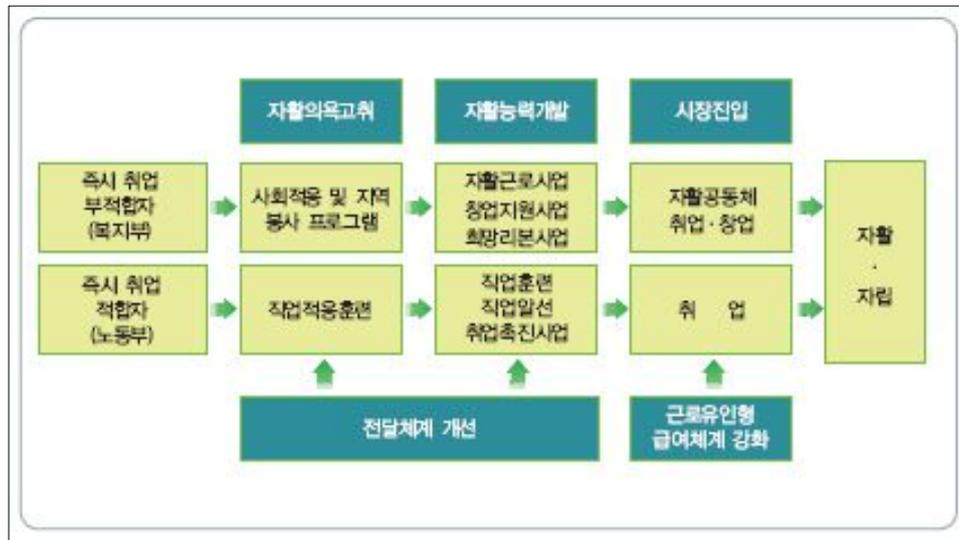
(단위: 명)



3. 자활사업 프로그램³⁾

자활사업프로그램은 ‘단계적 발전전략’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①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② 자활근로 →③ 자활공동체/직업알선·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크게 자활공동체·자활근로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취업촉진사업등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중심의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에 대한 밀착관리가 불필요하고 즉시 시장에 진입가능한 대상에게는 노동부 사업에, 밀착 사례관리와 보건복지서비스가 일괄 필요한 복합 취약계층은 복지부 사업에 배치된다.

<그림 2-3>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자료: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www.cssf.or.kr)

3) 자활사업프로그램 내용은 보건복지부(2010)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9)보건복지백서, 중앙 자활센터 홈페이지, 한국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 희망리본프로젝트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한편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수급여부와 관련해 조건부수급자가 가장 많은 50,193명이고 다음으로 차상위계층이 22,020명, 자활급여 특례자가 가장 적은 5,317명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자활근로가 압도적으로 많은 62,404명이고 다음으로 자활공동체가 9,438명, 성과형시범사업이 2,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창업이 가장 적은 16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를 통해 참여하는 인원은 1,857명으로 나타났다.

<표 2-4>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2009.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보건복지부, 노동부 합계	보건복지부						노동부 (계)
		계	자활근로	사회적응프로그램등	자활공동체	개인창업	성과형시범사업	
누계 (실인원)	77,532	75,675	62,404	1,668	9,438	165	2,000	1,857
조건부수급자	50,193	48,376	42,614	1,546	2,649	67	1,500	1,817
자활급여 특례자	5,317	5,277	4,531	18	681	7	40	40
차상위 계층 등	22,020	22,020	15,259	104	6,108	91	460	

자료: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www.cssf.or.kr)

1) 즉시취업부적합자 프로그램

(1) 디딤돌사업

디딤돌사업은 근로 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조건부수급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디딤돌사업의 구성은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계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수립된 치료재활계획 등 개별적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치료적 면담

을 의미하고 방법에 따라 내소상담(수행기관 방문), 현장방문(가정방문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은 수행기관을 방문한 등록자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실시하는 치료적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집단프로그램의 내용은 알코올 프로그램, 의욕고취프로그램, 직업적응프로그램, 자조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교육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 관련 교육, 근로의욕증진 및 재활프로그램 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안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연계활동으로는 지역 내 자활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알코올남용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거나, 자활사업 수행기관 등이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상태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과의 자활관련 사업조정 및 상호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 등 4개소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약 1,3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목적으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이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며, 인턴형 자활근로는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특히 2003년부터 간병도우미, 집수리, 청소, 음식물·폐자원 재활용 등 5대 표준화사업으로 선정하여 도시·농촌 지역별로 구분하여 가급적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지역별 특성, 지역자활센터의 기술·경험에 따른 자활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영농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 사업과 외식사업 등 대도시 생활권 중심의 전략사업을 적극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유형별 참여자에 대한 자활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한편 5대 표준화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청소사업단이 가장 많은 240개(20.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집수리 203개(17%), 간병 174개(14.9%) 등의 순이다.

<표 2-5> 5대 표준화 자활사업 추진현황 (2009.12.31 기준)

구분	계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 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단수	704	203	174	240	83	4
비율(%)	60.5	17	14.9	20.6	7.2	0.3

자료: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백서.

(3)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즉 2인 이상의 수급자 등이 근로·생산·판매·소득공동체 등을 결성·운영하여 자립기반을 다지는 공동출자방식의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발전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참여자의 주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창업한다.

한편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개인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활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상위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참여자는 관할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업실시 지역은 관할 지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에 대해 5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자활공동체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시 수행한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하여야 한다.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 및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용한 점포임대 등 각종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조달 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공동체는 2009년말 현재 1,164개에 약 9,400명이 참여하였으며 1인당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자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 희망리본프로젝트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층에게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목표로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2010년 현재 인천, 경기, 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의 목적은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참여자 스스로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사업 수행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초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여건 및 욕구를 파악해 개별 자립계획을 세우고, 취업 준비 관련 교육을 통해 맞춤형취업준비와 취업알선을 진행하며, 직업안정 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안정을 이룰수 있도록 지원한다(희망리본프로젝트 홈페이지 www.hoperibbon.or.kr).

참여자들은 최대 1년간 기초상담 및 근로 의욕 제고, 양육·간병·사회적응 등 근로여건 조성,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아 체계적인 자활경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희망리본프로젝트의 큰 특징은 수행지역과 수행기관이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2009년의 경우, 취·창업 1개월 유지시 85만원, 경제활동 6개월 유지시 85만원, 탈수급시 110만원이 지급되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2010년 2월 기준으로 취·창업률이 31%로 나타났다.

2) 즉시취업적합자 프로그램

노동부 주관으로서, 고용지원센터가 즉시취업적합자에 대해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이 있었으나, 2009년에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이란 진단·경로 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 등 사업과정 전체를 통합한 것이다. 이는 취업 능력이 있는 즉시취업적합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패키지 참여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직업 훈련 등을 일괄 연계 받는 한편, 경과적 일자리 및 취업성공수당 등을 제공받게 되었다.

4. 자활사업 추진기반⁴⁾

1) 자활인프라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해 살펴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강화와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2006년 7월부터 3단계

4) 자활사업 추진기반 내용은 보건복지부(2010)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9)보건복지백서,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한국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읍면동 단위에서 수행되었던 통합조사 및 자활사업관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들도 시·군·구로 이관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8년에 이르러서는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자활참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연계 형성이 중요하게 되었다(김태완·전지현, 2009).

구체적으로 자활센터별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수행체계의 총괄단위로 자활사업 DB구축, 자활사업 및 수행기관의 성과를 관리하고 조사 및 연구, 교육 훈련을 추진·운영하고, 자활지원제도 관련 대상자사업실적 등에 대한 중앙단위의 정보집적·관리·분석 및 자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 7월 설치되었다.

광역자활센터는 광역 단위의 자활지원체계로서 광역자활공동체 및 취업·창업 지원하며 참여자와 실무자의 교육을 광역단위에서 실시한다. 지역단위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광역단위의 공동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설치되었다. 2004년도 3개 지역(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선정하여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자활지원사업의 인프라로서 사업성과와 의미를 확인한 후 2007년에는 자활사업 전달체계로 포함되었고 2008년에는 3개 지역(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을 설치하여 현재 6개소가 운영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수행의 기본단위로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 사례관리 및 취업·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경환외, 2009). 1996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개소의 자활지원센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개편하였으며 2003년말 209개소, 2005년말 기준 242개소로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28개소 지역자활센터에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하여 취업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활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사회복지관·정신보건센터 등 다양한 민간기관 등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적극 활용하여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창업지원사업

(1) 자활기금 설치·운영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미비하여 지역별 편차가 큰 실정이고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 국고보조금 등이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2009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2,360억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생업자금융자 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융자대상자는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한 자이고, 소득 및 재산기준과 관련하여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당 무보증대출을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한도로 연리 고정 3%, 5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저소득층가구 515가구에 총 72 억원을 융자하였다.

(3) 무담보 소액대출(Micro-credit)

무담보 소액대출은 일반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담보나 보증요건보다는 자활의지나 사업계획성을 기준으로 약 2천만원 규모의 자금대여와 2% 이자율,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 조건,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9개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매년 20억원씩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경기광역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창업자금을 대여하였으며 2009년부터 예산이 확대(20억→330억)되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늘리고 있다.

또한 지역별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을 증설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지원규모 증가와 병행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의 체계적 확산을 진행 중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출범으로 전국 200~300개 지역 미소금융법인 설립 및 재계·금융권의 민간 기부금(10년간 2조 원) 모집을 통해 미소금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부처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미소금융으로 통합되었다.

3)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⁵⁾는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현재 학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공제율 30%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5) 금액 산출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자활근로소득×30%-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통해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제도를 2010년 신규 실시 중에 있다.

이상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지원인프라를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은 공동체 창업으로 가기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활공동체는 실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참여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디딤돌사업에서는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자활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3절 자활사업 성과논쟁

1. 선행연구 검토

1) 자활사업 성과논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고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를 표방하면서 ‘근로와 복지의 연계(Welfare to Work)’를 추구하였다(임동진, 2001). 즉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제도의 확대이자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이상록진재문,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후,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초기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활사업이 기대만큼

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하여, 신동면(2003)은 자활사업이 비숙련 노동력을 양산하여 수급탈출율을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하였고, 구인회(2005)는 자활사업의 통합급여체계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활로 인한 급여자격의 박탈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탈수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화되므로 근로 능력자에 대한 자활의 유인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석원·정희정(2007)은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자활사업 유형별로 구분한 뒤 자활사업의 성과를 결정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취·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원수와 학력이고, 자격증에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가족구성원수, 직장경력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성과를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탈빈곤효과나 노동시장 참여효과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활사업 자체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생활태도 변화 등과 관련한 주관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는 매우 가시적인 성과(이상록·진재문,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김진구 2007)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영환 외(2005)는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자립 의지 및 생활태도의 변화’, ‘주관적 자립전망’이라는 주관적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실제 자활사업을 참가자의 탈수급 및 탈빈곤에 따른 경제적 성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자활사업의 대상이 공공부조로부터 탈출하기 어렵지만 무조건적 수급으로 인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태도의 변화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근로능력층과 달리 근로동기의 향상과 같은 사회 심리적 지원 등의 사회적응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자활사업이 자활성적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50%가 초졸 이하의 저학력이며,

69%가 중장년층이고, 여성이 75%를 차지하는 등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저학력·고연령·여성이 주요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고용 조차 취약한 대상에게 자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자활여부를 평가하는 한 앞으로도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경환 외, 2009).

한편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서도 현재 자활사업은 일자리의 참여 유지와 취·창업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성과를 모두 이루어야 한다. 즉 자활사업의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인 성과로는 취·창업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에서 단기적인 운영목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사회적 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을 습득하도록 지원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증가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지역자활센터 평가는 참여자 수(단기 목표)와 취·창업(장기적 목표), 탈빈곤(궁극적 목표)을 모두 지역자활센터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취·창업과 탈빈곤의 경우, 지역자활센터만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다양한 외생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의 취·창업은 참여자의 의지와 정부의 노력, 노동시장 환경과 가족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이다(고경환, 2010). 또한 탈빈곤이라는 목표가 자활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가구여건, 급여 등 자활만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서비스, 시장 등 다양한 여건에 달려있다(노대명, 2006).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자활사업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를 포함한 다각적 측면의 성과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어떠한 지표들을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자활사업 성과지표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취업률’과 ‘탈수급율’ 등을 포함한 양적지표이다. 이는 ‘자활’이라는 개념이 사전적으로 경제적 자립 즉, ‘탈수급’을 의미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탈수급’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주장에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해, 먼저 자활사업 초기단계에 이루어진 자활사업 성과연구로 임동진(2001)과 강병구 외(2002)의 연구가 있다. 임동진(2001)은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해 자활사업 취업대상자 중 부적격자, 조건불이행자, 취·창업자의 비율을 살펴보고 강병구 외(2002)에서는 자활사업의 현재 참여자와 취·창업으로 인한 자활사업 종료자를 대상으로 취업률, 고용안정성, 근로소득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자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노대명 외(2006)의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와 김승권 외(2008)의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가 있다. 노대명 외(2006)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건강 및 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 상태 등의 가구 조사와 사회보험, 근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개인사 등의 개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승권 외(2008)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투입, 과정, 성과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 및 과정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관련 자원투입의 적극성과 자활지원 인프라의 충분성을 살펴보고, 성과평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실적을 통해 센터평가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성과와 관련한 연구로, 자활사업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손능수(2005)는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영환 외(2005)는 경기지역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손능수(2005)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적 자활’, ‘직업능력의 향상’, ‘고용안정성의 향상’, ‘인식과 태도의 변화’의 4가지 평가 기준을 지표로 제시하였다. 반면 이영환외(2005)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자립 의지 및 생활태도의 변화’, ‘주관적 자립전망’이라는 주관적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영향요인 및 사례연구 또한 이루어졌는데, 전재욱(2008)은 성과영향 요인과 관련해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정원(2007)은 사례연구와 관련해 자활사업 참여자 뿐 아니라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전재욱(2008)은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해, 독립변수로 프로그램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구분해 설정하였다. 내부요인은 프로그램 전망, 동료관계, 프로그램 내 참여자의 조직현신도이고 외부요인은 영업정도, 자활사업단간 협력, 외부지원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김정원(2007)은 자활사업에 참여 외부빈곤층을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배제를 겪은 외부집단으로 설정하고, 자활사업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의 함양을 통해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완화에 기여함을 논증하고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신뢰’, ‘사회적 관계의 증대’, ‘정보의 취득’ 등의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초기 이루어진 연구(임동진, 2001; 강병구 외, 2002)의 경우, ‘취·창업율’ 같은 당장의 ‘자활’과 관련된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관련한 연구(노대명 외, 2006; 김승권 외, 2008)에서도 ‘경제활동 상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등의 경제적인 측면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반면 자활사업 실태조사(손능수, 2005; 이영환 외, 2005)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활’측면 뿐 아니라 ‘인식과 태도의 변화’ 등의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추가하고 있고 이후 이루어진 전재욱(2008)의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체계화해, 독립변수를 외부요인(영업정도 등)과 내부요인(동료관계, 전망 등)으로 분리해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정원(2007)은 자활사업 참여 자체를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사회적 기회 확대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자활사업의 성과는 주로 양적 측

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양적 측면의 성과를 포함한 질적 측면의 성과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표 2-6> 자활사업 성과 선행연구

연구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평가항목
임동진(2001)	노동부 취업대상자	-설문조사 -표본조사	- 자활사업의 성과: 취·창업자비율
강병구외(200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	-설문조사 -표본조사	- 노동성과: 취업률, 고용안정성, 가구소득, 생계수단, 임금
손능수(2005)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당1개 자활후견기관 (8곳)	-설문조사 -전수조사	-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자활 - 직업능력의 향상 - 고용안정성의 향상 - 인식과 태도의 변화
이영환 외(2005)	자활사업참여자 기관장 및 실무자	-설문조사 -전수조사	- 주관적 만족도: 사업내용, 임금, 작업환경, 동료와의 관계, 자활후견기관의 교육 및 지원, 직원과의 관계 - 주관적 평가: 자립관련 요소와 생활태도 변화 - 주관적 전망: 자립전망
노대명 외(2006)	근로빈곤층	-설문조사 -표본조사	- 일자리 만족도 - 노동성과: 취업생존율, 탈수급율, 직업기술보유율, 취·창업 성공율
김정원(2007)	자활후견기관 참여자및종사자 비영리자활지원조직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 사업단 참여성과: 경제적 성취, 심리적안정, 생활기회 확대, 규범의 수용 - 사회관계에서의 신뢰: 일터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뢰 - 사회적 지위
전재욱(200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독립변수:프로그램 내부요인(전망, 동료관계, 조직현신도) 외부요인(영업정도, 자활사업단간협력, 외부지원) -종속변수:사업성과, 의식변화, 참여자 만족도
김승권외(2008)	232개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 -현장조사 -전수조사	- 과정평가:사업기반,사업기획 및 추진 - 성과평가:사업실적

자료: 고경환 외(2009), “자활사업 평가 연구 -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김정원(2007), 전재욱(2008) 연구내용 포함.

2. 양적 측면의 성과

앞서 선행연구와 관련해, 양적 측면의 성과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동진(2001)의 연구(N=257, 대도시 및 중소지방도시 자활참여자)에서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해 살펴보면, 자활 15.1%, 부적격자 31.7%, 조건불이행 40.9%를 나타냈으며, 특히 조건불이행에 의한 자활사업의 종료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처방이 시급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조건불이행의 이유 중에서는 일자리가 있어(42%), 취업 및 진학(20.6%), 경증장애(12.4%) 등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있어의 이유는, 자활사업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 비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이 가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다.

둘째, 강병구 외(2002)의 연구(N=501명, 자활 종료자)를 살펴보면, 먼저 취업률의 경우,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사업 종료자 501명 가운데 312명(63%)이 조사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었지만, 나머지 189명(37.7%)은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보면 종료자 중 취업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45.6%이며, 6개월이하인 경우는 71.9%로 나타나 자활종료자의 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자활취업대상자의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손능수(2005)의 연구(N=208명, 대구광역시 자활참여자)에서는 참여자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관련해, 자활프로그램 참여자가 상위프로그램으로 상향⁶⁾하였을 경우 직업능력이 발전한 것으로 가정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6개 자활후견기관을 조사한 결과, 2002년의 경우 11.1%가 상향하였으며, 특히 사회적일자리형에서 상향한 경우가 월등히 많으며, 그리고 2003년의 경우 16.0%가 상향하였고, 마찬가지로 사회적일자리형에서 상향한 경우가 많았다.

6)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공동체'로 이동 또는 '사회적 일자리형'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로의 이동을 의미함.

네 번째로, 노대명 외(2006)의 연구(N=전국 7,072가구)에서는 특히 근로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근로능력자 또는 취업자가 빈곤상태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을 ‘고용불안’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 중 빈곤층의 평균 고용기간은 36.9개월인데 비해, 비빈곤층의 고용기간은 93.9개월로 나타나 빈곤층의 고용불안이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는 먼저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교육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특성에서는 가구주여부, 가구규모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종사상지위가 고용유지기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와 관련한 김승권 외(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활분야의 경우, 사업기반(10점 만점)은 3.70, 사업기획 및 추진(20점 만점)은 10.93, 사업실적(40점만점)은 30.25으로 나타나 세 영역 모두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의 경우, 전국평균이 12.46%로, 대도시 12.99%, 중·소도시 11.23%, 농·어촌이 13.15%로 각각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차상위계층의 취·창업률의 경우, 전국이 11.67%로, 대도시 13.40%, 중·소도시 12.06%, 농·어촌이 9.72%로 각각 나타나 농·어촌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취·창업률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3. 질적 측면의 성과

다음으로 질적 측면의 성과 연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자 한다.

먼저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관련해 손능수(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의 형성에 있어서 평균 3.19(5점만점)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근로의욕 증진 측면에서는 평균이 3.88로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의 형성측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평균 3.33으로 나타나 보통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 향상과 관련해서는 평균 3.47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고, 불건전한 생활의 절제력 향상의 측면에서 평균 3.14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전체 평균은 3.31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전재욱(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내부요인인 사업전망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내부요인인 조직헌신도가 높을수록 의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망을 생각하여 사업단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던 김정원(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비영리자활지원조직에 참여하는 빈곤층이 사회자본 형성을 통해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먼저 참여자는 일터를 사회적 지지자로서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일터를 통해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각종 경험과 학습을 하게 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 단순히 빈곤층으로서의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한편 다른 일터에 비해 구성원간의 관계에서는 협력자로서의 관계가 더 강조되며, 수평적인 조직 운영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일터는 보호의 장, 학습의 장, 관계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런 점들이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자활사업의 성과는 양적, 질적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 측면은 탈수급율, 취·창업률 등의 경제적 성과이고 질적

측면은,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한 자활참여자의 주관적 만족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 논의될 인천의 지역자활사업과 관련한 성과 역시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제4절 소결

자활사업은 199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제도화된 대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주 대상으로 지원의 성격과 함께 강제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일반 저소득시민의 참여가 증가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룰수 있도록 단계별로 디딤돌 사업,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직업알선, 창업지원프로그램등이 있으나, 참여자들의 가장 많은 비중은 자활근로에 집중되어 있다. 자활인프라에 있어서도 약 10년의 자활사업 역사속에서 2010년 현재, 24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중이며, 인천을 비롯한 6개 지역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국단위의 중앙자활센터가 개소하여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사업은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자활사업의 성과를 탈수급율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두게 되면 매우 미미한 성과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미한 사업 성과의 근본적 원인은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연계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고, 자활이라는 최종적 성과는 자활사업 뿐 아니라 근로시장 여건등 외부요인에서 영향을 받아 자활사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잣대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질적 측면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실제로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자립의지, 생활태도 변화와 같은 주관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는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제3장 인천 지역자활사업 현황

제1절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역사

제2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수행기관

제3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내용

제4절 소결



제3장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현황

제1절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역사

1. 태동기

자활사업의 시작은 보건복지부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생산공동체 운동을 경험했던 민간의 창의성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1996년에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자활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출발하였다. 1996년에 지정된 자활지원센터는 그동안 지역에서 생산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을 진행해왔던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이 주축이 되었다. 1996년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었고 그 중 4개 자활지원센터를 ‘나눔의 집’에서 위탁받았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인천에서 10년 동안 지역활동을 꾸준히 하였던 ‘송림동 나눔의 집’과 ‘사랑방 교회’가 센터 개설을 공동으로 준비하였고 ‘나눔의 집’ 명의로 동구자활지원센터를 지정 받기에 이른다.

최초 자활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동구자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공동부업장 및 집수리, 취업기능 교육, 취업 알선 등이었다. 당시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시점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1998년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자활근로사업과 유사한 특별취로사업이 시행되어 자활사업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시기에 시도되었던 특별 취로사업의 사업 유형이 대부분 이후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의 표본이 되었고 지금의 5대 표준화 사업 등 현재 자활사업의 골격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시범사업이 인천을 포함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자활지원센터가 매년 추가 지정되었고 1999년에 20개 센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인 1999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자활사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2000년 하반기에는 ‘자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자활후견기관’으로 변경되고 20개소이던 기관도 70개소로 확대 지정되

었다. 인천지역에서도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가 주축이 되어 2000년 8월경에 5개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4곳의 자활후견기관이 각각 새로운 법인에 의해 지정위탁을 받았고 2002년에 서구지역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받음으로써 인천지역 자활후견기관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2001년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것처럼 본격적인 자활사업 시행의 원년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정비하고 초기 성공사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 기관당 자활공동체를 2개 이상씩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고 인천지역에서도 그러한 지침의 영향으로 자활공동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보건복지부의 5대 표준화사업이 선정되면서 자활사업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5대 표준화 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지역에서는 이미 공공근로 사업을 전개했을 때부터 진행되던 사업이었다.

2. 형성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인천 자활사업의 형성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 인천지역 자활사업의 특징은 우선 자활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중요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요구와 그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전국적으로도 자활후견기관 평가로 인한 진통의 시기였고, 다양하게 제도개선을 모색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 영향으로 보건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모별 평가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는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철폐 및 실무자 처우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갈등이 전면화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속에서도 자활사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는데, 자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5대 표준화 사업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였고 자활근로 사업을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다양화 하였다. 이 시기 인천지역 자활사업의 특징은, 2003년 청소사업을 비롯하여 재활

용, 배송, 외식, 가사·간병,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등 개별기관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공동사업단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활공동체가 ‘한마음 농장’이라는 명칭으로 2005년 1월에 발족하였고 2006년에는 ‘정다운 간병’과 ‘서해택배’가 2006년 10월에 연이어 출범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인천광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개소되어 광역단위의 창업 및 취업지원체계의 구축,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3. 성장기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인천지역 자활사업의 성장기라 할 수 있다. 2007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 명칭을 ‘지역자활센터’로 변경하였다. 명칭변경의 이유는, ‘후견’이라는 표현이 참여주민들로 하여금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활,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자활사업의 특성에도 맞지 않다는데 있었다. 이 시기 인천지역 자활사업의 특징은 사회서비스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활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위상을 갖게 된 점이다. 사회서비스사업이 2008년 정부에 의해 시장적 기제라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형태로 전환되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사업도 대폭 확대되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비롯한 노인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사업, 산모도우미사업 그리고 재가장기요양센터 사업에 다수의 센터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물로 한국자활협회가 주도하여 2009년에 시작된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인 주)온케어⁷⁾에 인천지역자활협회도 2010년 가입하였다.

더불어 이무렵 전국적인 흐름에 맞추어 인천지역도 자활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였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2009년과 2010년에 바자회 등 지

7) ㈜온케어는 지역자활센터의 최대 강점인 전국적 규모를 통합 네트워크화하여 규모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동브랜드의 개발, 통합 홍보 및 마케팅실시, 콜센터 운영, 교육훈련활동의 지원, 제반 행정업무간소화를 위한 IT시스템지원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경쟁력강화와 일자리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참여자의 소득증대와 서비스품질의 표준화 및 수준향상을 지원코자 설립되었다.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venture.or.kr 참고함.

역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고, 한국자활협회와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실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인천지역자활협회 차원에서도 2010년에 자활공제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자활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한편 인천지역의 공동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형성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7년 공동사업 운영규정을 수정하고 체계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단은 전반적으로 공동사업의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각 공동사업단 사무국이 해체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초보적인 연대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2010a).

■ 인천 지역자활사업 연혁

- 2000. 11.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인천지부 창립총회
6개 기관 참여 - 계양, 남구, 동구, 부평, 연수, 중구자활후견기관
- 2001. 7. 강화, 남구미추홀, 남동,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지정 승인
- 2002. 1.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인천지부 제2차 정기총회
3. 인천지부 영농 공동사업단 발족
7. 서구자활후견기관 지정승인
- 2003. 3.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인천지부 실무자회의 창립총회
4.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인천지부 청소공동사업단 발족
- 2004. 2. 인천지부 교육, 정책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출범
6.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창립대회 및 개소식
8. 재활용, 배송, 외식네트워크사업단 발족
- 2005.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실시(187명)
3. 광역자활공동체 ‘한마음농장’ 창립
5. 자활교육센터, 노인간병지원센터 개소식
- 2006.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실시 (350명)
4. 보건복지부 지원 산모도우미 사업실시
10. 광역자활공동체 정다운간병 출범

- 10. 광역자활공동체 서해택배 출범
- 2007. 1.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실시
- 7. 광역자활공동체 출범식 “서해택배”
- 10. 치매예방조사사업 실시
- 2008. 1.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및 치매예방조사사업 실시
- 1. 사단법인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창립총회
- 10. 외식공동사업단 <담음>개관 (인천사회복지회관 내 구내식당)
- 10. 사단법인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법인허가
- 2009. 3. 인천광역자활센터 제1차 희망키움뱅크사업 수행기관 선정
- 5.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 9. 인천협회 확대정책위원회(자활제도개선 관련)
- 2010. 3. 인천광역자활센터 희망리본프로젝트본부 사업 개시
- 2010. 4. 외식공동사업단 <담음 II> 개관 (인천노인종합문화센터 구내식당)
- 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지원 조례 제정공포(인천광역시조례 제4419호)
- 5. 6.2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초청간담회
- 6. 인천협회 제1차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 시행

제2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수행기관

1.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인천지역의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 간 사업의 교류와 조정,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의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인천지부가 2000년 창립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대비하고 광역형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독자법인으로 출범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과 공동교육, 정책연구 및 개발, 공동사업단의 운영, 연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설립년도 : 2000. 11. 09.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7-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203호

<그림 3-1>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조직도



자료 :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www.injahwal.or.kr)

조직도를 살펴보면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위원회에 사무국과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11개 지역자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단을 두고 있다.

2.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는 개별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발굴 및 육성, 창업·취업을 통한 다양한 자활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천광역자활센터는 그 동안 군·구 차원에서 추진되던 자활사업 등을 인천광역단위로 확대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

활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활사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림 3-2> 인천광역자활센터 조직도



자료 : 인천광역자활센터홈페이지(www.injiwon.or.kr)

- 설립년도 : 2004. 6. 10.
- 운영주체 : 인천광역시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7-5 사회복지회관 4층
- 직 원 수 : 9명

인천광역자활센터의 조직은 명예회장(시장), 운영위원회장, 센터장, 사무국장 각 1명씩이며 그 밑에 3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역자활센터

인천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가 가장 빠른 1996년 6월에 설립되었다. 이후 2000년도에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가 2001년도에 남구미추홀, 부평남부, 강화가 설립되었고 서구가 가장 늦은 2002년도에 설립되었다.

운영주체는 사)실업극복 인천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연수지원센터 등 실업단체가 다수이며, 다음으로 종교법인이 많다. 직원 수는 중구와 부평구가 가장 많은 16명이고 다음으로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15명, 부평남부가 14명, 동구, 계양구가 13명, 강화가 11명, 남구미추홀이 8명이다.

<표 3-1> 지역자활센터 현황

구분	중구	동구	남구	남구미추홀
설립년도	2000. 08. 24	1996. 06. 29.	2000. 08. 24	2001. 07. 01.
운영주체	사)서해주민센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사)실업극복 인천본부	인천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주소	전동 2-1 구)인천여고 3층	화수동 79-2	학익1동 332-2 2층	용현5동 371-13 용신노인정 2층
직원수	16명	13명	15명	8명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부평남부
설립년도	2000. 08	2001. 07. 01.	2000. 08. 01.	2001. 07. 01.
운영주체	실업극복 연수지원센터	청솔의집	사)인천여성 노동자회	실업극복 부평지원센터
주소	청학동 485-2번지 3층	간석3동 37-4번지 1층 청솔의집	부평3동 277-21 세원빌딩 201호	부평1동 542-69 성원빌딩 3층
직원수	15명	15명	16명	14명
	계양구	서구	강화	/
설립년도	2000. 08. 01.	2002. 07. 02.	2001. 07. 01.	
운영주체	재)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실업극복 인천서구 지원센터	대한성공회 사회복지법인 서울교구	
주소	계산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서구 검암동 679-3 4층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	
직원수	13명	16명	11명	

자료: 인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2010. 6. 30. 기준.

제3절 인천 지역자활사업 내용

1.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1개의 공동사업단(네트워

크 회의)과 사회서비스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3개의 광역자활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참여자 및 종사자 대상의 교육,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대사업, 자활참여자와 종사자를 위한 자활 한마당 등을 진행하고 있다.

- 11개 공동사업단(네트워크회의) 운영
 - 배송, 골판지제조, 외식, 복지간병, 청소, 주거복지, 재활용,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인큐베이터, 취업사례, 복지-고용연계사례관리

- 3개 광역자활공동체 운영지원
 - 한마음농장, 서해택배, 정다운 간병

- 사회서비스관련 사업 진행
 - 간병교육, 가사간병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중증장애활동보조인교육, 치매노인조사 및 돌봄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 자활한마당
 - 2003년부터 연 1회 인천지역 자활참여자(저소득)와 종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자활의지를 다지는 행사인 <인천자활한마당> 개최

- 자활정책 연구 및 제안
 - 저소득 자활 참여자(조건부수급권자, 차상위)의 성공적 자활자립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 및 제안
 - 저소득층 연대를 통한 자긍심을 갖게 유도하는 공제협동조합 사업

-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 참여자: 인성교육, 사회적응훈련, 자활의식고취 교육, 창업마케팅 교육

- 종사자: 상담자, 매니저, 카운셀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준비

▪ 연대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대사업
-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연계사업
-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연대사업
- 기타 지역 현안에 따른 다양한 연대사업

<표 3-2> 광역공동체 및 공동사업단 현황

(단위: 천원)

번호	사업단명(상호)	참여 센터	출범 연도	참여 자수	연매출	사업단 개요
1	영농(한마음 농장) 광역공동체	3개	2005년	2명	90,000	유기농 채소 등 납품
2	배송(서해택배) 광역공동체	3개	2006년	1명	25,000	소화물 택배 및 일반 택배 / 저소득층 정부 양곡택배
3	정다운간병 광역공동체	11개	2006년	60명	380,000	일반유료간병, 공동간병 등
4	골판지제조 공동사업단	2개	2008년	18명	280,000	포장용 골판지 박스제조 및 DB발송
5	외식공동사업단	3개	2008년	21명	550,000	사회복지회관 등 구내식당 운영
6	배송공동사업단	4개	2005년	62명	360,000	소화물 택배 및 일반 택배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표 3-2>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에서는 광역공동체와 관련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중 정다운간병공동체가 가장 많은 참여자(60명)와

연매출액(380,000천원)을 나타낸다. 공동사업단은 역시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배송공동사업단 참여자가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식공동사업단이 매출액 550,000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 네트워크 회의 현황

(단위: 천원)

번호	사업단명(상호)	참여 센터	출범 연도	참여 자수	연매출	사업단 개요
1	복지간병 네트워크회의	11개	2004년	100명	무료	저소득층병원간병 지원
2	청소사업단 네트워크	10개	2004년	180명	1,200,000	학교화장실 청소, 일반 청소 대행, 건물 관리 등
3	주거복지사업단 네트워크회의	11개	2007년	150명	파악불가	현물급여 및 일반공사, 사회공헌사업
4	자원재활용 네트워크회의	4개	2005년	40명	180,000	생활용품 재활용 선별 작업, 아파트 분리수거 등
5	장애통합 교육보조원 네트워크회의	7개	2005년	110명	파악불가	초·중·고등학교 및 보·교육시설에서 장애아동 보조원파견
6	인큐베이터 네트워크회의 (10개 센터)	10개	2010년	300명	매출 없음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 (자활근로의 GateWay 역할)
7	취업사례 네트워크회의	10개	2010년	500명	매출없음	저소득층 취업 및 창업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제반사업, 인문학 교육
8	복지-고용연계 사례관리 네트워크회의	10개	2010년	-	매출없음	저소득층 자활근로참여자의 자활·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제반사업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네트워크 회의 현황과 관련해 <표 3-3>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총 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 유료, 무료 또는 유·무료 혼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료사업의 경우, 청소사업단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참여자(180명)와 연매출액(1,200,000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2. 인천광역자활센터 사업

인천광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은 기획사업팀, 인력개발팀, 창업MC팀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로, 기획사업팀은 기획사업과 경영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사업의 경우 자활정책, 업무능력개발, 운영위원회 운영, 대외협력, 행정·회계지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경영지원사업은 광역공동체, 자활공동체, 공동사업단,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력개발팀은 체계적인 초기상담을 통해 근로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능력 향상과 지속적 사례관리 서비스로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인력개발팀에서는 Win-Start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Win-Start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지원사례관리센터 운영, 지역자원 멘토개발, 교육개발 및 인프라구축, 고용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2009년도 Win-Start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구인 7,729명, 구직 2,744명, 상담 5,282명, 직업알선 2,990명, 취업 576명, 서비스지원 430명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Win-Start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희망의 인문학’사업의 2010년 실적을 살펴보면, 3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실적이 횡수 50회에 참여인원 225명으로 집계되었다.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제공으로 ‘일할 여건 조성 및 인력양성’을 목표로 자활교육센터 관리, 참여자 자격취득과정, 근로의욕고취 교육과정, 교육개발 및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MC팀은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을 위한 희망키움뱅크, 자활

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Micro Credit',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행복키움 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희망키움뱅크사업은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소액창업자금 대출사업으로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함께 컨설팅, 창업교육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복키움 통장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모집 및 면접과정을 거쳐 총 281명에게 매칭이 이루어졌다.

한편 기타특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2010년도 사업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총 600명의 취업관리인원 중 130명이 취업해 22%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3. 11개 지역자활센터 사업

인천광역시의 11개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4> 인천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10년 기준)

구분	합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자활근로사업	1,116	3	774	127	212	0
자활공동체사업	328	-	75	16	74	163
사회서비스사업	447	-	95	6	148	198
기타사업(장기요양)	283	-	129	18	61	75
계	2,174	3	1,073	167	495	436

자료 :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2010) '인천지역자활 10년 기념백서'에서 재구성.

총 참여자는 2,174명이며 이중 조건부수급자가 1,073명으로 가장 많고, 자활 특례자, 일반수급자를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수는 1,243명 달한다.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57.2%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수가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사업, 자활공동체사업의 순이다.

<표 3-5> 자활근로사업 현황 1

기관명	사업유형	개수	사업명
인천중구	사회서비스	6	복지간병사업, 방과후공부방, 시설관리, 의류리폼&공예, 물세탁, 인큐베이터
	시장진입형	3	청소, 주거복지사업, 국수
인천동구	사회서비스	3	복지간병사업, 인큐베이터사업, 청년인큐베이터사업
	시장진입형	2	주거복지사업, 청소
인천남구	사회서비스	6	복지간병, 복지시설, 장애통합보조원, 재활용매장, 주거복지, 인큐베이터
	시장진입형	5	자원재활용, 청소, 배송, 실크, 용역
남구미추홀	사회서비스	3	복지간병사업, 복지시설사업, 미추마대사업
	시장진입형	4	한아름두부, 자원재활용, 미추자원, 미추패션
인천연수구	사회서비스	5	복지간병사업, 주거복지, 자원재활용, 인큐베이터, 장애통합교육
	시장진입형	3	청소, 외식, 배송
인천남동구	사회서비스	6	사회서비스, 인큐베이터, 장애통합교육, 주거복지, 홈케어, 공동작업장(수제, 조립작업 물품 주문 생산)
	시장진입형	3	청소사업단, 종합배송, 골판지사업단
인천부평구	사회서비스	7	복지간병사업, 주거복지사업, 방문학습도우미사업, 인큐베이터, 자전거사업, 작업장사업(부업 및 라인 작업, 파견근무), 시설도우미파견사업
	시장진입형	3	청소사업, 종합건물관리사업, 가정관리사업

자료: 인천 11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인천광역시 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93개의 자활근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 57개, 시장진입형이 36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부평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많은 7개이고 다음으로 중구·남구·남동구·부평남부·서구가 6개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진입형의 경우, 남구가 가장 많은 5개이고 다음 순으로 남구미추홀·부평남부·강화가 4개를 나타내고 있다.

<표 3-6> 자활근로사업 현황 II

기관명	사업유형	개수	사업명
인천부평남부	사회서비스	6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홈티사업단(특수아동에 대한 학습 및 일상생활 지도), 복지간병사업, 희망두레사업(노동취약 대상에 대한 저숙련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인큐베이터
	시장진입형	4	배송사업단, 골판지박스제조사업, 외식사업, 청소사업
인천계양구	사회서비스	6	외식사업, 복지간병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 주거복지사업, 인큐베이터, 홈케어사업
	시장진입형	2	학교환경개선사업, 외식구내식당공동사업
인천서구	사회서비스	6	돌봄사업단, 하안빨래방(소외계층 무료세탁), 무지개농장(허브재배 및 판매), 장애통합교육보조, 급식지도보조교사사업단
	시장진입형	3	서해크린(학교청소용역과 대행업), 희망나눔급식센터, 주거복지사업
인천강화	사회서비스	3	복지간병사업, 재활용사업, 인큐베이터
	시장진입형	4	부업사업(문구,사무용품 라인작업 생산), 영농사업, 주거복지, 청소사업
계		93 (사회서비스 57, 시장진입형 36)	

자료: 인천 11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다음으로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동체 수는 56개이고 월평균 총매출액 규모는 498,05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3-7>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I

(단위: 천원)

기관명	공동체명	개수	사업내용	월평균 매출액
인천 중구	청소사랑	4	입주청소, 건물 일상관리	66,000
	나눔특송		택배사업	20,000
	더불어숲		온, 오프라인 헌책방	3,000
	정다운간병		유료 병원 간병	
인천 동구	한마음도우미	4	산후관리 및 간병 서비스 제공	6,000
	정다운간병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	2,332
	늘푸른사람들		건물관리, 건물 청소 등 친환경 크린 서비스 제공	11,585
	해뜨리인테리어		종합 인테리어, 주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지원	4,400
인천 남구	한마음인테리어	7	현물급여, 장애인주택개보수, 에너지재단, 일반유료공사 외	15,000
	생활나눔터		재활용품 수거판매 및 매입판매, 간석동 점포운영, 나눔장터 참가	3,000
	서해크린		지역개발바우처 '우리집깔끔이' 사업, 유료청소 및 소독작업 외	3,000
	남구특송		DDTO 위탁 및 당일택배 물량배송, 지역내 행낭 및 현대홈쇼핑 배송	10,000
	한마음장기요양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14,000
	한마음농장		토마토, 상추, 고추 등 농작물재배, 하우스 4,000, 노지2,700평 농장운영	10,000
	정다운간병		일반 유료간병인 파견 서비스 실시, 인천의료원 등 계약 파견	1,500
남구 미추홀	정다운간병	4	유료 병원간병서비스	2,500
	행복인테리어		유료 집수리	3,700
	화영패션		애견옷, 의류제작, 앞치마 제작	9,000
	미추현수막		현수막 제작 및 판매	7,500

자료: 인천 11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채구성, 2010. 6. 30. 기준.

<표 3-8>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II

(단위: 천원)

기관명	공동체명	개수	사업내용	월평균 매출액
인천 연수구	서해크린	2	입주청소, 건물 일상관리	4,000
	정다운간병		유료 병원 간병	
인천 남동구	삼우종합건설	5	현물급여, 장애인주택개보수, 에너지재단, 일 반유료공사 외	20,000
	네모크린		유료청소· 및 소득작업 외	8,000
	네모택배		위탁 및 당일택배 물량배송, 양곡택배사업	7,000
	내꿈일터		유료청소	5,000
	정다운장기요양		재가 방문, 목욕 장기요양 사업	60,000
인천 부평구	부평건설	7	종합인테리어사업, 주거복지사업, 온수온돌전 문업체	12,000
	크린인천		청소전문대행업, 건물일상관리, 이사입주청소	9,000
	정다운간병		병원간병서비스, 공동간병실 운영, 간병시장 확대	3,300
	서해크린		학교화장실 청소 토탈서비스, 청소전문대행업	5,000
	산모아가마지		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 인천협 회 사업단 선정으로 공동운영	3,300
	살림벗		가정일의 전문화 /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사입주청소	3,600
	사랑애돌봄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등급판정 외 이용자대상 재가간병서비스	12,500
인천부 평남부	하늘연	6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12,363
	서해택배		배송전문 사회적기업 구축	
	정다운간병		공동간병실 운영을 통한 간병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확대	1,500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및 가사서비스 제공	1,000
	정다운요양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8,330
	부남택배		수급자 정부양곡 택배사업	4,548

자료: 인천 11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표 3-9>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III

(단위: 천원)

기관명	공동체명	개수	사업내용	월평균 매출액
인천계양구	엄마손간병	10	유료간병서비스로 재가, 요양원, 병원에서 활동	10,000
	정다운간병		광역공동체로, 병원간병서비스	공동관리
	아가마지		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인천협회 사업단으로 공동운영	공동관리
	깨끗한나라		건물위생관리 청소공동체	5,000
	(주) 희망일터		각종 학교용역관리와 특수가전 크리닝 등 일반대행 작업	18,000
	새단장인테리어		종합인테리어, 주거복지사업	10,000
	153군부대찌개		부대찌개 전문 외식공동체	8,000
	군부대찌개		부대찌개, 칼국수 전문 외식공동체	8,000
	청국장부대찌개		부대찌개 전문 외식공동체	6,000
은빛화원	전문기능교육을 통해, 전문인 양성과 화훼 관련 물품판매 및 실내외 조경	8,000		
인천서구	새롬종합장식	3	현물급여, 장애인주택개보수, 에너지재단, 일반유료공사 외	10,000
	e-푸른세상		유료청소· 및 소득작업 외	6,500
	정다운간병		일반 유료간병인 파견 서비스	
인천강화	모닝컴	4	OEM방식으로 문방용품 생산 및 저소득 계층에 외주	5,000
	녹색자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 및 재활용품	6,000
	더불어건설		현물급여 및 에너지사업 등	2,600
	도우누리		돌봄서비스	2,000
공동체 수 합계		56	월평균 총매출액	498,058

자료: 인천 11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개별 지역자활센터별로 살펴보면, 공동체 수는 계양이 가장 많은 10개이고 다음으로 남구·부평이 7개, 부평남부가 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남동구가 가장 많은 100,000천원이며, 다음 순으로 중구가 89,000천원, 계양이 73,000천원, 남구가 56,500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및 기타사업 현황과 관련해 살펴보면 전체 63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사회서비스사업은 37개, 기타사업은 26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2~4개의 사업수를 나타내고 있고 기타사업의 경우는 1~3개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0> 사회서비스 및 기타사업 현황

구분	사업유형	개수	사업내용
인천중구	사회서비스	3	재가 가사간병사업, 재가노인돌봄사업, 장애활동보조원 사업
	기타	2	아동 1:1 멘토링사업, 취업사례관리사업
인천동구	사회서비스	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기타	3	취업사례관리, 무료직업소개, 복지-고용사례관리
인천남구	사회서비스	3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	2	취업사례관리, 복지-고용사례관리
남구미추홀	사회서비스	2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
	기타	1	복지-고용사례관리
인천연수구	사회서비스	3	재가장기요양기관,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
	기타	2	복지-고용사례관리, 취업사례관리
인천남동구	사회서비스	5	가사간병방문서비스,노인돌봄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증장애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기타	2	취업사례관리, 복지-고용사례관리
인천부평	사회서비스	4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중증장애활동보조,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	3	저소득아동 1:1 생활·학습지원사업, 취업사례관리, 복지-고용사례관리
인천부평남부	사회서비스	3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	3	취업사례관리, 복지-고용사례관리, 디딤돌프로그램(근로욕이 낮은 조건부수급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인천계양구	사회서비스	2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
	기타	2	취업사례관리, 복지-고용사례관리
인천서구	사회서비스	4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 장애활동보조바우처 사업, 희망케어장기요양
	기타	3	취업사례관리, 복지-고용사례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
인천강화	사회서비스	4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미, 장애활동보조, 산모 도우미
	기타	3	장기요양서비스, 취업사례관리, 복지-고용사례관리
합 계		63(사회서비스: 37, 기타:26)	

자료: 인천 11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4.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지원

인천광역시는 광역자활센터와 11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윈-스타트(Win-Start)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를 2010년 제정하는 등의 지원을 해왔다.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와 윈-스타트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및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2008년 552,600천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10월 현재 852,600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국비지원은 매년 변화가 없었으나 시비의 경우 윈-스타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2008년 250,200천원에서 2010년 10월 현재 550,200천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광역자활센터 지원내역

(단위: 천원)

년도	사업명	지 원 액(천 원)				지원내용
		계	국비	시비	군구비	
2008	운영비	552,600	302,400	250,200		인건비 및 사업비
	합 계	552,600	302,400	250,200		
2009	운영비	551,000	301,000	250,000		
	윈-스타트 사업	240,000	-	240,000		
	합 계	791,000	301,000	240,000		
2010	운영비	552,600	302,400	250,200		
	윈-스타트 사업	300,000	-	300,000		
	합 계	852,600	302,400	550,200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10. 11. 1. 기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와 관련해 인건비 및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2008년 1,998,200천원에서 2010년 2,208,013천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군구비가 15%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2> 지역자활센터 지원내역

(단위: 천원)

년도	사업명	지 원 액(천 원)				지원내용
		계	국비	시비	군구비	
2008	운영비	1,998,200	1,398,740	299,730	299,730	인건비 및 사업비
2009		2,008,500	1,405,950	301,275	301,275	
2010		2,208,013	1,545,605	331,204	331,204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10. 11. 1. 기준.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 23,616,455천원에서 2009년 27,500,235천원, 2010년 31,717,109천원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중 국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 16%, 2010년 15%를 각각 나타냈다. 또한 시비의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 3%, 2010년에는 24%를 나타냈다. 반면 군구비의 경우 2009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예산 지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인천광역자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2009년부터 윈-스타트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윈-스타트사업은 체계적인 초기상담을 통하여 근로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동행면접,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연계,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와 고용의 윈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윈-스타트사업은 시 차원에서 자활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13> 자활사업 지원내역

(단위: 천원)

년도	사업명	지 원 액(천원)			
		계	국비	시비	군구비
2008	자활근로	17,302,368	15,281,384	1,298,651	722,333
	자활장려금	2,266,906	1,822,286	360,093	84,527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장려수당	132,000		132,000	
	지역봉사	72,000		65,000	7,000
	자활한마당	17,000		17,000	
	사회적응(디딤돌)	71,644	64,480	7,164	
	가사간병	3,754,537	2,698,797	527,870	527,870
	합 계	23,616,455	19,866,947	2,407,778	1,341,730
2009	자활근로	21,812,281	19,399,396	1,596,356	816,529
	자활장려금	2,295,440	2,050,840	165,197	79,403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장려수당	136,800		136,800	
	지역봉사	72,000		65,000	7,000
	자활한마당	50,000		50,000	
	사회적응(디딤돌)	71,644	64,480	7,164	
	가사간병	3,040,070	2,154,000	443,035	443,035
	행복키움통장	22,000		22,000	
합 계	27,500,235	23,668,716	2,485,552	1,345,967	
2010	자활근로	24,274,184	21,576,858	1,780,165	917,161
	자활장려금	2,526,749	2,255,791	182,358	88,600
	희망리본프로젝트	1,634,500	1,306,500	328,000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장려수당	158,000		158,000	
	지역봉사	72,000		65,000	7,000
	자활한마당	30,000		30,000	
	사회적응(디딤돌)	66,070	59,463	6,607	
	가사간병	1,245,662	883,000	181,331	181,331
	희망키움통장	1,469,944	1,362,323	107,621	
	행복키움통장	240,000		240,000	
	합 계	31,717,109	27,443,935	3,079,082	1,194,092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10. 11. 1. 기준.

또한 인천광역시가 2010년 4월 26일 제정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는 자활사업에 관련한 조례제정으로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이다.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에는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자활사업지원에 대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자활기금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하며, 기금용도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포함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용도는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③제37조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④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⑦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다.

2010년 9월 현재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기금은 9,750,714천원이며,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부분은 3,335,590천원이다. 자활사업에 대한 집행은 2010년 9월 현재 ‘자활공동체 창업(사업)자금지원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에 100,000천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행복키움통장), 에 240,000천원으로 총340,000천원이 지출되었다.

제4절 소결

인천 자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6년 동구자활후견기관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 11개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자활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의 지역자활센터협회와 센터들이 협력하여 한마음 농장, 서해택배, 정다운간병과 같은 3개의 광역자활공동체, 골판지제조 공동사업단, 외식공동사업단, 배송공동사업단과 같은 3개의 공동사업단을 운영하고, 8개의 네트워크회의가 2004년 복지간병네트워크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중이다.

인천광역자활센터는 2004년 설립되었고, 기획사업팀, 인력개발팀, 창업MC팀에서 각각 광역공동체, 자활공동체, 공동사업단등의 지원업무와 Win-Start사업, 교육사업 등을 시행하고, 희망키움뱅크사업, 행복키움통장사업, 마이크로크레딧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의 보건복지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자활사업을 실시중이다.

인천의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0년 현재 2,174명이며, 이 중 자활근로사업에 1,116명, 자활공동체사업에 328명, 사회서비스사업에 447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93개 사업이 각 센터별로 진행중에 있고, 이 중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은 57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36개이다. 자활공동체는 56개 공동체가 운영중이며, 월평균 총매출액 규모는 498,058천원이며, 사회서비스사업은 37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회서비스 사업의 주요 사업은 재가가사간병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장애활동보조사업 등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인천광역시에서는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윈-스타트사업 실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제정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 지역자활사업은 우리나라 지역자활사업의 태동과 함께 하였고, 광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 인천광역시 자체사업인 Win-Start사업, 자활사업 지원조례제정 등 타시도에 비하여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인천 지역자활사업 역시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후 장에서는 인천 지역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비롯한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고,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그간의 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4장 인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 및 종사자 인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조사결과

제3절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조사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인천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인식

제1절 조사개요

본 조사의 대상은 인천 지역자활센터 11곳의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로서 각 센터당 자활사업 참여자 50명씩을 할당하고 종사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참여자용과 종사자용으로 개발하였고, 사전조사를 지역자활센터 1곳에서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의 약 2주간이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참여자용 463부, 종사자용 123부이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작업을 진행한 후 SPSS 17.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와 종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주로 활용하였다.

■ 조사내용

설문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용과 자활사업 종사자용으로 구분된다.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지는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일반사항, 자활사업 참여현황, 자활의욕,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이후 인식변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참여자 설문조사의 세부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및 항목
일반사항	연령, 성별, 학력, 수급여부, 수입, 주거상태, 주거지역
자활사업 참여현황	참여 자활사업 분야, 참여기간, 참여동기, 만족도, 어려움점
근로조건 · 기관만족도	급여, 노동시간, 강도, 교육 등의 만족도, 기관운영에 대한 만족도
참여자 인식 및 복지욕구	자활의욕, 자활사업 참여이후 생활변화,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설문지는 성별, 학력, 직위, 수입과 같은 일반사항과 직무 중요도, 직무 수행정도, 직무 불만족 요인, 교육훈련, 자활사업의 발전정도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 종사자 설문조사의 세부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및 항목
일반사항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위, 고용형태, 종사기간, 수입, 담당 사업단수
직 무	직무별 중요도, 직무별 수행정도, 직무 불만족 요인, 교육훈련, 개선사항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중장기적 추진사업, 자활사업 발전에 대한 인식

제2절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조사결과

1. 일반적 사항

본 조사에 응답한 자활사업 참여자 463명의 일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350명(75.8%)으로 남성 112명(24.2%)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40대가 190명(41.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36명(29.8%), 다음으로 30대, 60대, 20대의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242명(54%)로 가장 다수였으며 초졸 및 중졸이하는 31.3%였다. 그러나 전문대졸 및 대졸이상도 14.8%로 조사되었다. 수급여부에 있어서는 조건부수급자가 291명(64.5%), 일반수급권자는 19명(4.2%), 자활특례자는 36명(8.0%), 차상위계층이 85명(18.8%)로서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3.9%로 빈곤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주거상태에서도 자가인 경우는 12%에 불과하고, 전세 23.5%, 월세 34.2%, 무료임대 등 기타가 30.3%로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처해있었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12	24.2
	여자	350	75.8
	합계	462	100.0
연령	20대	8	1.8
	30대	78	17.1
	40대	190	41.7
	50대	136	29.8
	60대	44	9.6
	합계	456	100.0
학력	초졸이하	50	11.2
	중졸이하	90	20.1
	고졸이하	242	54.0
	전문대졸 이하	50	11.2
	대졸이상	16	3.6
	합계	448	100.0
수급여부	조건부수급자	291	64.5
	일반수급권자	19	4.2
	자활특례자	36	8.0
	차상위계층	85	18.8
	기타	20	4.4
	합계	451	100.0
월평균수입	70만원 미만	111	24.2
	70만원이상 - 100만원 미만	182	39.7
	100만원이상 - 130만원미만	113	24.7
	13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37	8.1
	160만원 이상	15	3.3
	합계	458	100.0
주거상태	자가	55	12.0
	전세	108	23.5
	월세	157	34.2
	무료 임대 등 기타	139	30.3
	합계	459	100.0

<표 4-4> 주거지역

구분	빈도	백분율
중구	34	7.3
동구	39	8.4
남구	82	17.7
남동구	47	10.2
계양구	38	8.2
부평구	96	20.7
서구	34	7.3
연수구	49	10.6
강화군	44	9.5
합계	463	100.0

응답자들의 주거지역은 용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9개 군·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남구와 부평구 거주 비율이 각각 17.7%, 20.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가족 구성

구분	빈도	백분율
본인+배우자+부모+자녀	12	2.6
본인+배우자+자녀	114	24.9
본인+배우자	22	4.8
본인+자녀	208	45.5
본인+부모+자녀	18	3.9
본인+부모	18	3.9
나혼자	65	14.2
합계	457	100.0

가족구성원에 있어서는 본인과 자녀만이 동거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208명 (45.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홀로 생활하는 1인가족은 65명(14.2%)이었다.

<표 4-6> 성별 한부모 가족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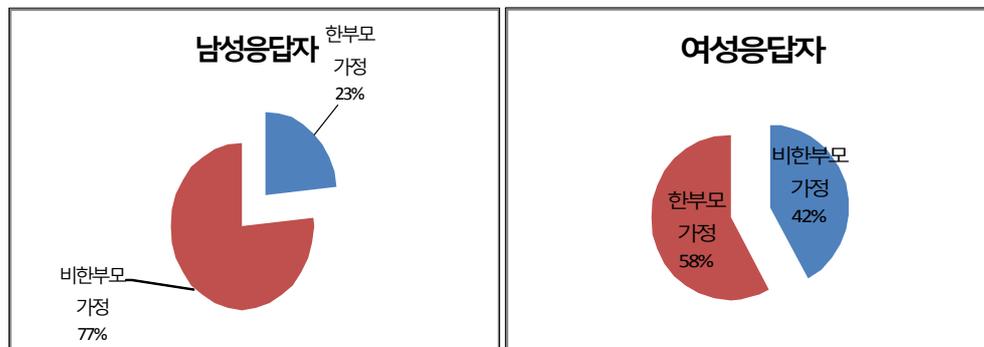
구분	본인+자녀	본인+부모+자녀	합 계	성별비 ^{a)}
남자	23	3	26	11.50
여자	185	15	200	88.50
합 계	208	18	226	100

a) (남자합계/합계)*100, (여자합계/합계)*100

한부모가족 중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88.5%로 나타났고, 남성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11.5%의 비율로 나타났다⁸⁾.

이를 <표 22>의 전체 여성응답자(N=345) 대비 여성한부모가족(N=200)의 비율을 살펴보면, 58%의 여성응답자가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났고 <표 22>의 전체 남성응답자(N=111) 대비 남성 한부모가족(N=26)의 비율을 살펴보면, 23.4%의 남성응답자가 남성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나 역시 여성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전체 여성 및 남성 응답자 중 한부모 가정 비율(N=456)



응답자의 가족 수를 살펴보면 3인이 129명(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이 115명(25.3%), 2인이 109명(24.0%)였고 6인 이상이 7명(1.5%)으로 가장 작았다.

8) 전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이 여성이 75.8%, 남성이 24.2%임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높고 남성이 비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7> 가족 수

구분	빈도	백분율
1인	62	13.7
2인	109	24.0
3인	129	28.4
4인	115	25.3
5인	32	7.0
6인 이상	7	1.5
합계	454	100.0

응답자 본인을 제외하고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94명 (20.5%)에 불과하여, 79.5%의 응답자들은 자활사업에 의한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4-8> 수입가족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94	20.5
없다	365	79.5
합계	459	100.0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92명만이 응답하여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53명(57.6%)가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질병 등의 의료문제가 19.6%, 부양문제가 12.0%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응답도 5명(5.4%)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표 4-9>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	백분율
경제문제	1	1.1
가족관계	4	4.3
자녀교육 및 양육	53	57.6
질병 등의 의료문제	18	19.6
부양문제(환자, 장애가족, 노부모 등)	11	12.0
정신건강 관련 문제(음주, 우울, 정신장애 등)	5	5.4
합계	92	100.0

2. 자활사업 참여현황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가 214명(47.0%)로 가장 많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135명(29.7%)이며,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57명(12.5%),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40명(8.8%)로 나타났다.

<표 4-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구분	빈도	백분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35	29.7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214	47.0
자활공동체	57	12.5
사회서비스 바우처	40	8.8
기타	9	2.0
합계	455	100.0

자활사업 참여 전 실업상태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응답은 1년 이하가 198명(44.6%)이지만 5년 초과인 경우도 69명(15.5%)로서 일부참여자들은 긴 실업기간을 거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4-11> 자활사업 참여 전 실업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1년 이하	198	44.6
2년 이하	75	16.9
3년 이하	55	12.4
4년 이하	22	5.0
5년 이하	25	5.6
5년 초과	69	15.5
합계	444	100.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외에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률은 130명 (28.8%)로서 대다수인 71.2%의 참여자들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처음 접하는 자활사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자활 외 사업 참여 경험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130	28.8
없다	321	71.2
합계	451	100.0

자활사업에 참여한 총 기간에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33.1%, 1년 미만이 30.7%이지만 , 5년 이상의 장기간 참여자도 14.6%에 달하고 있다.

<표 4-13> 자활사업 참여 총 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103	30.7
1년 이상 - 3년 미만	111	33.1
3년 이상 - 5년 미만	72	21.5
5년 이상	49	14.6
합계	335	100.0

자활사업 참여동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175명 (39.1%)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자활사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는 31.3%, 창업위한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12.9%, 사회참여(소속감)를 위해서는 5.8%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의 참여동기가 더욱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4-14> 자활사업 참여동기

구분	빈도	백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175	39.1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140	31.3
창업을 위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58	12.9
사회참여(소속감)을 위해서	26	5.8
기타	49	10.9
합계	448	100.0

<그림 4-2> 자활사업 참여동기



연령대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동기를 교차분석한 결과, 수급자격유지와 관련해서 30대가 가장 높은 51.8%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40대가 41.6%를 나타내었다. 근로활동 참여는 50대가 가장 높은 46.3%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30대이하가 35.7%를 나타내었다. 창업을 위한 기술습득은 40대가 가장 높은 18.9%를 나타내었다.

<표 4-15> 연령대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동기

(단위: 명, %)

구분	수급자격 유지	근로활동 참여	창업을 위한 기술습득	사회참여	기타	전체
30대 이하	4	5	2	1	2	14
	28.6%	35.7%	14.3%	7.1%	14.3%	100.0%
30대	44	20	11	3	7	85
	51.8%	23.5%	12.9%	3.5%	8.2%	100.0%
40대	79	49	36	9	17	190
	41.6%	25.8%	18.9%	4.7%	8.9%	100.0%
50대	33	57	8	8	17	123
	26.8%	46.3%	6.5%	6.5%	13.8%	100.0%
60세 이상	12	8	1	4	5	30
	40.0%	26.7%	3.3%	13.3%	16.7%	100.0%
전체	172	139	58	25	48	442
	38.9%	31.4%	13.1%	5.7%	10.9%	100.0%

자활사업의 만족정도는 매우 불만족과 조금 불만족을 합하면 16.0%이고, 조금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하면 32.0%로 만족하는 비율이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51.9%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관식 응답으로 물은 결과, 급여가 적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건부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 인간관계의 어려움, 근무환경의 불결, 기술습득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4-16> 자활사업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25	5.4
조금 불만족	49	10.6
보통	240	51.9
조금 만족	82	17.7
매우 만족	66	14.3
합계	462	100.0

자활사업이 자활과 자립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11.6%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참여자들의 다수가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표 4-17> 자립자활 도움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9	4.2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34	7.4
보통	189	41.4
약간 도움이 됨	139	30.4
매우 도움이 됨	76	16.6
합계	457	100.0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의 1순위 응답으로는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 어렵다가 75.2%로 나타났고, 이는 2순위 응답에서도 11.2%로 자활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2순위 응답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집안일(육아, 간병 등)을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도 1순위 5.2%, 2순위 17.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

<표 4-18>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렵다	319	75.2	35	11.2
집안일(육아, 가족의 병간호 등)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22	5.2	56	17.9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다	11	2.6	16	5.1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3	0.7	16	5.1
일이 어렵고 힘들다	4	0.9	34	10.9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16	3.8	32	10.2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2	0.5	6	1.9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3.8	73	23.3
건강 때문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17	4.0	41	13.1
음주 등 생활습관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	-	1	0.3
기타	14	3.3	3	1.0
합계	424	100.0	313	100.0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및 자립자활 도움정도와 관련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표 4-19>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 만족도 및 자립자활 도움정도

구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자활사업 만족도	남자	112	3.16	1.05	459	-1.072
	여자	349	3.28	0.99		
자립자활 도움정도	남자	111	3.32	1.10	454	-1.909
	여자	345	3.53	0.94		

다만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활사업 만족도와 관련해 여자의 경우 3.28로 남자의 3.1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자립자활 도움정도 역시 여자가 3.53으로 남자의 3.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자활사업 만족도 및 자립자활 도움정도와 관련한 평균점수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 및 (공동체)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마땅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145명(34.1%), 나이가 너무 많다가 101명(23.8%),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가 45명(1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취업 및 (공동체)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백분율
취업 창업에 대한 욕구가 없다	31	7.3
학력이 낮다	33	7.8
나이가 너무 많다	101	23.8
마땅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45	34.1
어떤 직장이 있는지 취업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33	7.8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육아, 가족의 간병 등)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	45	10.6
기타	37	8.7
합계	425	100.0

한부모와 비한부모의 취업 및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미($p < 0.01$)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집안일(육아, 가족의 간병 등)을 돌보아 줄 사람의 부재로, 비한부모 가정의 경우 8.0%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5%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와 관련해서는 비한부모 가정이 29.2%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17%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부재와 관련해서는 비한부모 30.5%, 한부모 38.1%로 양측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한부모·비한부모의 취업 및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 비교

(단위: 명, %)

구분	육구 부재	낮은 학력	나이	기술 부재	취업 정보 부족	집안일을 돌보아 줄 사람의 부재	기타	합계
비한부모	18	21	66	69	19	15	18	226
	8.0%	9.3%	29.2%	30.5%	8.4%	6.6%	8.0%	100.0%
한부모	13	12	33	74	13	30	19	194
	6.7%	6.2%	17.0%	38.1%	6.7%	15.5%	9.8%	100.0%
합 계	31	33	99	143	32	45	37	420
	7.4%	7.9%	23.6%	34.0%	7.6%	10.7%	8.8%	100.0%

$\chi^2=18.256$, $df=6$, $p<0.01$

3. 근로조건 및 기관만족도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급여에 대한 부분,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 노동강도, 노동환경, 기능교육,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4-22> 근로조건 만족정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급여	456	2.34	0.84
노동시간	451	3.23	0.74
노동강도(힘든 정도)	453	3.00	0.79
노동환경(작업장 환경)	450	2.81	0.85
기능교육	445	2.88	0.82
전반적인 만족도	450	3.01	0.74

매우 불만족은 1점이며, 매우만족은 5점에 해당되는데, 급여에 대한 만족이

2.3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노동환경은 2.81점, 기능교육은 2.88점, 노동강도는 3.00점, 노동시간은 3.23점, 전반적 만족도는 3.01점으로 만족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기관운영 만족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직원은 귀하게 정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한다	455	3.46	0.87
자활사업을 하면서 내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449	3.16	0.83
직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451	3.42	0.89
직원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제공해 준다.	452	3.37	0.91
내가 속해있는 사업팀의 담당은 나에게 성의껏 자주 상담을 해준다.	455	3.57	0.89
내가 속해있는 사업팀은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다.	453	3.35	0.87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55	3.30	0.85

<그림 4-3> 기관운영 만족도

(단위: 5점만점 평균점수)



기관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내가 속해있는 사업팀의 담당은 나에게 성의껏 자주 상담을 해준다가 3.5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직원은 정중

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항목이 3.46점, 직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3.42점으로 타 항목에 비하여 만족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활사업을 하면서 내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항목은 3.1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방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연령대에 따른 근로조건 및 기관운영 만족도와 관련해 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다만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40대가 가장 낮은 평균 2.82점을 나타내었고 기관운영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30대가 가장 낮은 3.24점을 나타내었다. 가장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평균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4> 연령대에 따른 근로조건 및 기관운영 만족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비
근로조건 만족도	30세이하	14	3.04	0.67	1.409
	30대	88	2.95	0.66	
	40대	193	2.82	0.57	
	50대	124	2.87	0.58	
	60세이상	33	3.01	0.48	
	합계	452	2.88	0.59	
기관운영 만족도	30세이하	14	3.52	0.77	1.876
	30대	88	3.24	0.67	
	40대	193	3.36	0.81	
	50대	122	3.49	0.65	
	60세이상	33	3.48	0.66	
합계		450	3.39	0.73	

4. 참여자 인식 및 복지욕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대한 문항은 11개 항목으로서 5점만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항목의 질문에 동의할수록 점수가 높다. 11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3.94점으로서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에 대한 내용이며,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3.74점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에 대한 내용으로 자활사업이 근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해서 받는 보수가 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에 대한 문항은 평균 2.62점으로 보수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표 4-25> 자활의욕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지금 하는 일이 내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56	3.22	0.86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57	3.94	0.80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455	3.51	0.86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내게 중요해졌다.	455	3.54	0.88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452	3.74	0.78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56	3.64	0.88
일하는 목표가 명확해졌다.	451	3.47	0.89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다.	453	3.43	1.36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54	3.16	1.05
일해서 받은 보수가 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52	2.62	1.01
취업, 창업 준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52	3.17	0.95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생활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장 큰 변화로 여겨지는 것은 인생에 대한 계획,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로서 3.33점,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3.28점, 친구, 동료, 이웃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3.22점 등이었다. 그러나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결과와 유사하게 집안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3.06점으로 타 문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주변 생활환경의 긍정적 변화도 바람직한 결과이지만, 자활사업 자체에서 얻는 보수수준이 낮은 점은 자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6>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나도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했다.	451	3.14	0.86
집안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456	3.06	0.85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	447	3.22	0.80
친구, 동료, 이웃과 관계가 좋아졌다.	451	3.27	0.76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48	3.28	0.85
인생에 대한 계획,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454	3.33	0.86

<그림 4-4>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

(단위: 5점만점 평균점수)



연령대에 따른 자활참여이후 생활변화 및 자활의욕 정도와 관련해 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표 4-27> 연령대에 따른 자활참여이후 생활변화 및 자활의욕 정도

구분	연령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비
생활변화정도	30대이하	14	2.99	0.89	1.239
	30대	88	3.18	0.54	
	40대	193	3.20	0.67	
	50대	122	3.32	0.69	
	60대이상	33	3.22	0.50	
	합계	450	3.23	0.65	
자활의욕정도	30세이하	14	3.31	0.57	0.775
	30대	88	3.34	0.61	
	40대	193	3.44	0.68	
	50대	125	3.38	0.70	
	60세이상	33	3.54	0.59	
합계		453	3.41	0.66	

다만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활변화정도’와 관련해 30대 이하가 가장 낮은 평균 2.99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대가 3.18로 낮은 순을 나타내었다. 자활의욕정도과 관련해서도 30대 이하가 가장 낮은 3.31을 나타내었고 역시 30대가 다음으로 낮은 3.34를 나타내었다. 낮은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변화 및 자활의욕 만족도 평균을 나타내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1순위 응답에서는 61.6%, 2순위 응답에서는 22.4%로 가장 요구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주거관련 서비스가 1순위 응답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11.3%, 2순위 응답중에서는 가장 높은 29.6%로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표 4-28>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순위,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동보육서비스	46	10.6	32	8.6
경제적 지원서비스	268	61.6	83	22.4
재가 복지서비스	19	4.4	14	3.8
의료서비스	40	9.2	97	26.1
주거관련 서비스	49	11.3	110	29.6
상담서비스	5	1.1	26	7.0
기타	8	.8	9	2.4
합계	435	100.0	371	100.0

제3절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조사결과

1. 일반적 사항

자활사업 종사자 설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종사자 122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고, 이중 여성이 63.1%로 남성 36.9%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8.1%로 가장 다수이고, 40대는 30.5%, 30대 미만도 24.6%로 40대 이하에서는 비교적 고른 연령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50세 이상은 6.8%에 불과하여 젊은 연령층이 주로 종사하고 있다. 학력은 대졸이상은 89.3%이며, 이중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도 14.9%에 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학력이다. 그러나 월수입에 있어서는 140만원 이하가 34.7%, 140만원에서 160만원이 39.0%, 160만원에서 180만원이 11.9%, 180만원 이상은 14.4%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는 49.0%가 사회복지 관련 전공이고, 상담 및 교육관련 전공이 10.8%이지만, 기타 다양한 전공도 31.4%에 이른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은 41.0%, 비정규직은 59.0%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더욱 높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있다. 또한 평균 근무시간에서도 8시간 이하 근무는 7.4%에

불과하고, 8시간에서 10시간미만이 85.2%, 10시간 이상도 7.4%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2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45	36.9
	여자	77	63.1
	합계	122	100.0
연령	30세미만까지	29	24.6
	30-39세	45	38.1
	40-49세	36	30.5
	50세이상	8	6.8
	합계	118	100.0
결혼	기혼	74	61.2
	미혼	45	37.2
	기타	2	1.7
	합계	121	100.0
학력	고졸이하	11	9.1
	대졸이하	90	74.4
	대학원이상	18	14.9
	기타	2	1.7
	합계	121	100.0
월수입	140만원이하	41	34.7
	140-160만원	46	39.0
	160-180만원	14	11.9
	180만원이상	17	14.4
	합계	118	100.0

자활사업의 종사기간에 있어서는 1년 이하가 33.9%로 상당한 비율이며, 3년 이상은 34.7%에 불과하여 장기 종사자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담당하고 있는 사업단 수는 1개인 경우가 46명(37.7%)로 가장 다수이고, 2개인 경우는 40명으로 32.8%이며, 3개 이상인 경우도 14명(11.4%)으로 조사되었다.

<표 4-30> 조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전공분야	사회복지	50	49.0
	상당교육	11	10.8
	경제경영	4	3.9
	법행정관련	5	4.9
	기타	32	31.4
	합계	102	100.0
직급	센터장	5	4.2
	실장과장	10	8.4
	팀장	100	84.0
	기타	4	3.4
	합계	119	100.0
고용형태	정규직	50	41.0
	비정규직	72	59.0
	합계	122	100.0
평균 근무시간	8시간 이하	9	7.4
	8시간-10시간 미만	104	85.2
	10시간-12시간 미만	8	6.6
	12시간 이상	1	0.8
	합계	122	100.0
종사기간	1년 이하	41	33.9
	1년-3년	38	31.4
	3년 이상	42	34.7
	합계	121	100.0
사업단수	없음	22	18.0
	1개	46	37.7
	2개	40	32.8
	3개	11	9.0
	4개	2	1.6
	5개 이상	1	0.8
	합계	122	100.0

2. 직무관련 응답 결과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직무의 세부내용별로 5점 만점(5점은 매우 중요,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출해보았다. 가장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항목은 사업단 및 현장관리로서 4.55점이며, 다음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가 4.38점, 지역사회 자원연계 관련 업무가 4.20점이었다. 지역 네트워크 관련 활동은 3.98점, 회계, 사무등의 행정지원 업무는 4.01점으로 간접적 지원업무 성격인 경우는 참여자들을 직접 대하는 업무에 비하여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31> 직무 중요성 정도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업단 및 현장관리	121	4.55	0.57
지역사회 자원 연계관련 업무	122	4.20	0.63
지역 네트워크 관련 활동	121	3.98	0.68
상담 및 사례관리	121	4.38	0.64
자활관련 교육 업무	121	4.13	0.64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	122	4.01	0.70
기타	4	4.25	0.95

<그림 4-5> 직무 중요성 정도

(단위: 5점만점 평균점수)



근무연수에 따른 항목별 직무 중요성 정도와 관련해 분산분석을 실시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직무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5점 만점 기준)를 나타내었다. 다만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네트워크 활동의 경우, 근무연수가 1년 이하인 종사자의 평균점수가 4.08인 반면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종사자의 평균점수가 3.9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 역시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종사자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3.88로 나타났다.

<표 4-32> 근무연수에 따른 항목별 직무 중요성 정도

구분	근무연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비
사업단 및 현장관리	1년 이하	40	4.60	0.49	0.877
	1년-3년	38	4.45	0.68	
	3년 이상	42	4.60	0.54	
	합계	120	4.55	0.57	
지역사회 자원 연계관련 업무	1년 이하	41	4.34	0.69	1.884
	1년-3년	38	4.18	0.56	
	3년 이상	42	4.07	0.63	
	합계	121	4.20	0.64	
지역 네트워크 관련 활동	1년 이하	40	4.08	0.76	0.539
	1년-3년	38	3.95	0.61	
	3년 이상	42	3.93	0.67	
	합계	120	3.98	0.68	
상담 및 사례관리	1년 이하	41	4.56	0.59	2.633
	1년-3년	37	4.27	0.69	
	3년 이상	42	4.29	0.63	
	합계	120	4.38	0.64	
자활관련 교육업무	1년 이하	40	4.23	0.69	1.419
	1년-3년	38	4.18	0.56	
	3년 이상	42	4.00	0.66	
	합계	120	4.13	0.64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	1년 이하	41	4.05	0.70	0.929
	1년-3년	38	4.08	0.67	
	3년 이상	42	3.88	0.73	
	합계	121	4.00	0.70	

직무 수행정도 또한 5점 만점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주로 수행하는 직무이다. 가장 높은 수행정도는 평균 3.70점인 사업단 및 현장관리이고, 회계, 사무등의 행정지원 업무는 직무 중요도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수행정도에서는 3.6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이다. 지역네트워크 관련 활동은 직무중요도에서도 가장 낮았고, 수행정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4-33> 직무 수행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업단 및 현장관리	120	3.70	1.23
지역사회 자원 연계관련 업무	121	3.03	0.99
지역 네트워크 관련 활동	121	2.98	1.10
상담 및 사례관리	121	3.23	1.07
자활관련 교육 업무	120	3.22	1.02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	121	3.60	1.07
기타	7	4.14	0.89

<그림 4-6> 직무 수행정도

(단위: 5점만점 평균점수)



근무연수에 따른 항목별 직무수행정도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사업단 및 현장관리(P<0.1), 자활관련 교육업무(P<0.1),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P<0.01)와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근무연수에 따른 항목별 직무수행 정도

구분	근무연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비
사업단 및 현장관리	1년 이하	40	3.35	1.36	2.458*
	1년-3년	37	3.84	1.09	
	3년 이상	42	3.90	1.18	
	합계	119	3.70	1.23	
지역사회 자원 연계관련 업무	1년 이하	40	2.90	1.08	0.526
	1년-3년	38	3.11	0.98	
	3년 이상	42	3.10	0.95	
	합계	120	3.03	1.00	
지역 네트워크 활동	1년 이하	40	2.83	1.12	0.559
	1년-3년	38	3.03	1.02	
	3년 이상	42	3.07	1.17	
	합계	120	2.98	1.11	
상담 및 사례관리	1년 이하	40	3.43	1.05	1.538
	1년-3년	38	3.00	1.06	
	3년 이상	42	3.26	1.10	
	합계	120	3.23	1.08	
자활관련 교육업무	1년 이하	39	2.97	1.15	2.834*
	1년-3년	38	3.16	0.97	
	3년 이상	42	3.50	0.89	
	합계	119	3.22	1.02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	1년 이하	40	3.15	1.05	6.546***
	1년-3년	38	3.97	0.99	
	3년 이상	42	3.71	1.04	
	합계	120	3.61	1.07	

*P<0.1, **P<0.05, ***P<0.01

먼저 사업단 및 현장관리와 관련해 살펴보면,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종사자의 평균점수가 3.90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1년 이하

가 3.35로 가장 적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활관련 교육업무 역시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종사자의 평균점수가 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1년 이하의 종사자가 2.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근무연수가 1년-3년차 종사자의 평균점수가 3.97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1년 이하의 종사자가 3.15로 가장 적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위 및 급여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약간+ 매우)이 25.5%이고, 불만족(약간+ 매우)는 39.3%, 보통은 35.2%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보다 높다.

<표 4-35> 직위 및 급여 만족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아니다	12	9.8
아니다	36	29.5
보통	43	35.2
약간그렇다	27	22.2
매우그렇다	4	3.3
합계	122	100.0

급여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과 동일하게 급여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7.9%에 불과하고 43.9%는 급여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4-36> 급여가 공정한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아니다	14	11.4
아니다	40	32.5
보통	47	38.2
약간그렇다	17	13.8
매우그렇다	5	4.1
합계	123	100.0

그러나 업무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58.2%, 불만족 비율은 11.5%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보수수준 외에 업무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7> 업무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아니다	1	0.8
아니다	13	10.7
보통	37	30.3
약간그렇다	48	39.3
매우그렇다	23	18.9
합계	122	100.0

성별에 따른 직위·급여·업무 만족도와 관련해 t 검정을 실시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다만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자의 직위 만족이 2.83으로 남자 2.71보다 다소 높고 급여 만족 역시 여자가 2.75로 남자 2.51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업무만족과 관련해서는 남자가 3.78로 여자 3.55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38> 성별에 따른 직위·급여·업무 만족도

구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직위만족	남자	45	2.71	1.12	119	-0.624
	여자	76	2.83	0.92		
급여만족	남자	45	2.51	1.10	120	-1.304
	여자	77	2.75	0.91		
업무만족	남자	45	3.78	0.99	119	1.289
	여자	76	3.55	0.88		

자활사업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는 1순위 응답에서는 자활사업 운영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45.4%로 가장 높았고, 업무과중과 역할 불명확이 11.8%로 다음으로 높았다. 2순위 응답에서는 자활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17.9%로 1순위 응답과 동일하게 높았으며, 전망 불투명도 17.9%였다. 낮은 사회인식에 대해서도 1순위 응답에서는 10.1%, 2순위 응답에서는 13.7%로 주요한 불만족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표 4-39> 직무 불만족 요인 1순위,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활사업 운영의 어려움	54	45.4	21	17.9
낮은 사회인식	12	10.1	16	13.7
전망 불투명	7	5.9	21	17.9
업무과중 역할불명확	14	11.8	11	9.4
나와 기관가치 기준 다름	2	1.7	4	3.4
낮은 급여 생계 어려움	11	9.2	14	12.0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3	2.5	2	1.7
적절한 자활서비스 제공 어려움	11	9.2	20	17.1
많은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4	3.4	7	6.0
불만족 요인 없음	1	0.8	1	0.9
합계	119	100.0	117	100.0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 기술이 27.6%, 사업단 경영에 대한 전반적 운영기술이 26.8%로 높은 비율이며, 2순위 응답으로는 사회적 기업 진출을 위한 사전교육이 17.1%, 사업단 경영에 대한 전반적 운영기술이 13.8%로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정보수집기술에 대한 교육훈련도 1순위 13.8%, 2순위 13.0%로 교육훈련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0>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1순위,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담및사례관리기술	34	27.6	16	13.0
참여자와의관계형성기술	5	4.1	15	12.2
대인관계기술	4	3.3	6	4.9
사업계획서작성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정보수집기술	17	13.8	16	13.0
사업단경영에 대한 전반적 운영기술	33	26.8	17	13.8
회계세무분야기술	5	4.1	8	6.5
사회적기업 진출을 위한 사전교육	14	11.4	21	17.1
공문서작성 및 행정업무처리기술	1	0.8	9	7.3
기관 및 사업홍보를 위한 성공적인 홍보전략기술	7	5.7	15	12.2
기타	3	2.4	-	-
합계	123	100.0	123	100.0

3.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종사자가 인식하는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으로는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이 27.6%, 임금인상이 17.9%로 높은 비율이며, 2순위 응답으로는 자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지지 기반확충이 28.1%, 합리적 자활제도 개선이 1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순위 응답으로는 자활인력개발원 설립이 33.9%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설립이 31.4%, 자활공제조합 설립이 11.0%이다. 2순위 응답에서는 자활공제조합 설립과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 설립이 각각 20.2%로 가장 비율이 높은 항목이다.

<표 4-41> 개선사항 1순위, 2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후생복지의 확충	14	11.4	11	9.1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34	27.6	11	9.1
임금인상	22	17.9	19	15.7
다양한 교육 여건조성 및 해외연수지원	1	0.8	10	8.3
직무환경개선	4	3.3	11	9.1
업무과중해소를 위한 직원확충	6	4.9	3	2.5
합리적인자활제도개선	19	15.4	22	18.2
자활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지지 기반확충	21	17.1	34	28.1
기타	2	1.6	-	-
합계	123	100.0	121	100.0

<표 4-42> 자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순위,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회적기업 설립	37	31.4	19	16.7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 설립	11	9.3	23	20.2
저소득층 무담보 자활 신용금고	4	3.4	8	7.0
실무자육성을 위한 장학회설립	7	5.9	11	9.6
자활참여자 공동주거타운 계획	2	1.7	6	5.3
자활공제조합 설립	13	11.0	23	20.2
자활인재육성을 위한 자활인력개발원설립	40	33.9	22	19.3
기타	4	3.4	2	1.8
합계	118	100.0	114	100.0

자활사업의 발전정도를 5점 만점(5점에 가까울수록 발전정도가 높음)으로 질문하였는데 참여자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12점, 자활사업단의 발전정도는 3.03점으로 보통이상의 발전수준을 이루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

에 대한 제도와 정책, 사회적 인식, 인천의 관심과 지원의 항목에서는 각각 2.40점, 2.30점, 2.70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어 제도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발전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43> 자활사업의 발전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122	3.12	0.96
자활사업단의 발전 정도	122	3.03	0.75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121	2.40	0.90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2	2.30	0.89
인천 시·군·구 관심과 지원	122	2.70	0.92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의 발전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할 결과,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44> 성별에 따른 자활사업의 발전정도 인식 차이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남자	45	3.40	1.00	85.449	2.395**
	여자	76	2.96	0.91		
자활사업단의 발전 정도	남자	45	3.18	0.74	119.0	1.616
	여자	76	2.95	0.76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남자	44	2.41	0.94	118.0	0.238
	여자	76	2.37	0.87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남자	45	2.31	0.90	119.0	0.127
	여자	76	2.29	0.90		
인천 시·군·구 관심과 지원	남자	45	2.87	0.91	119.0	1.506
	여자	76	2.61	0.92		

*p<0.01 **p<0.05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인식변화와 관련해 평균점수가 3.40인 반면 여자의 경우 2.96으로 나타나 남자종사자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항목의 경우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남자의 자활사업 발전도에 대한 인식이 여자에 비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소결

인천지역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자 조사는 463명의 참여자가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여성 응답자가 75.8%로 다수이고, 이중에서 여성한부모는 전체의 43.7%로 조사되었다. 수급여부에 있어서는 조건부수급자가 64.5%, 일반수급자는 4.2%, 자활특례자는 8.0%, 차상위계층은 18.8%이며, 수입과 주거상태 모두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가 47.0%로 가장 다수였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29.7%, 자활공동체는 12.5%,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8.8%, 기타 2.0%였으며, 자활사업 참여동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유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근로활동 참여라고 응답하였다.

자활사업이 자립과 자활에는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48%), 참여하기 어려운점은 수입이 적은것이 1순위 응답이었으며, 이는 근로조건 만족정도에서도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34점으로 낮은 점과도 연관된다.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일해서 버는 돈의 소중함,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 종사자 조사는 122명의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이 응답하였고, 이 중 여성이 63.1%로 남성보다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89.3%로 대체로 고학력이지만 월수입에 있어서는 160만원 이하가 73.7%로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형

태에서는 정규직 41%, 비정규직 59%로 불안정한 고용에 처한 비율이 높고, 종사기간에 있어서도 3년 이하가 65.3%로 낮아 이직률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업무만족비율은 58.2%이지만, 급여만족 비율은 25.5%로 업무만족도에 비하여 급여만족도는 낮다. 직무 불만족 요인으로는 자활사업운영의 어려움, 업무과중과 역할의 불명확화, 전망불투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기술, 사업단 경영에 대한 전반적 운영, 사회적기업 진출을 위한 교육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 임금인상, 자활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지지 기반확충 등의 응답이 다수였고, 자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인력개발원이 설립되어야 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 자활공제조합설립 등이 주요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사회적 인식, 시·군·구의 관심과 지원 등은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제5장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

제1절 양적 측면의 성과

제2절 질적 측면의 성과

제3절 소결



제5장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

제1절 양적 측면의 성과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양적측면의 성과는 지난 10년간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사업현황, 조직규모등의 양적인 성장과 자활성공률로 구성하였다.

1.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장

2001~2010년 자활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수, 참여인원, 매출액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1> 2001~2010년 자활공동체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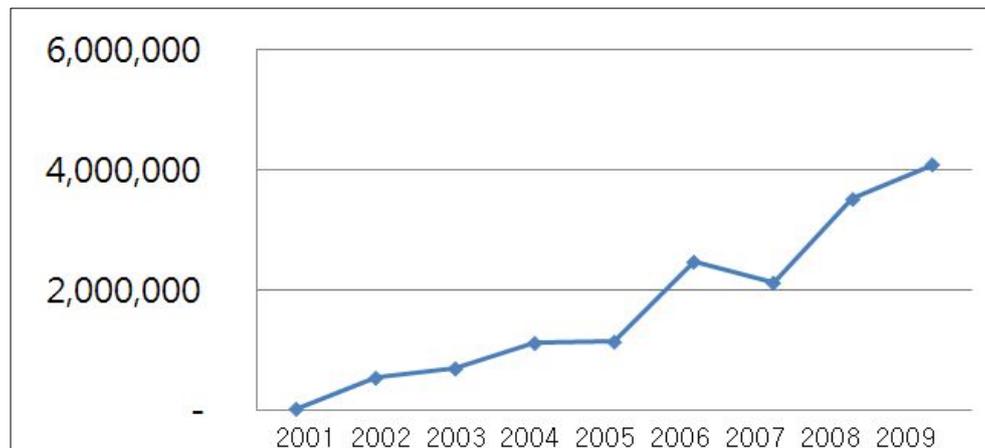
년도	자활공동체		
	사업수	참여인원	매출액
2001	10	40	38,700
2002	13	43	554,248
2003	10	46	709,108
2004	11	43	1,130,990
2005	16	67	1,152,951
2006	35	141	2,491,756
2007	35	146	2,133,962
2008	42	190	3,525,069
2009	54	237	4,097,954
2010(6월현재)	56	351	3,626,279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2001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사업수의 경우 10개에서 56개로 5.6배, 참여인원은 40명에서 351명으로 8.76배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의 경우 38,700천원에서 2009년 매출액은 4,097,954천원으로 105.8배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5-1> 2001~2009년 자활공동체 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2001~2010년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수, 참여인원,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비교해보면, 사업수의 경우 23개에서 93개로 4.09배, 참여인원은 312명에서 1,318명으로 4.22배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의 경우 1,437,769천원에서 2009년에는 12,582,792천원으로 8.75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5-2> 2001~2010년 자활근로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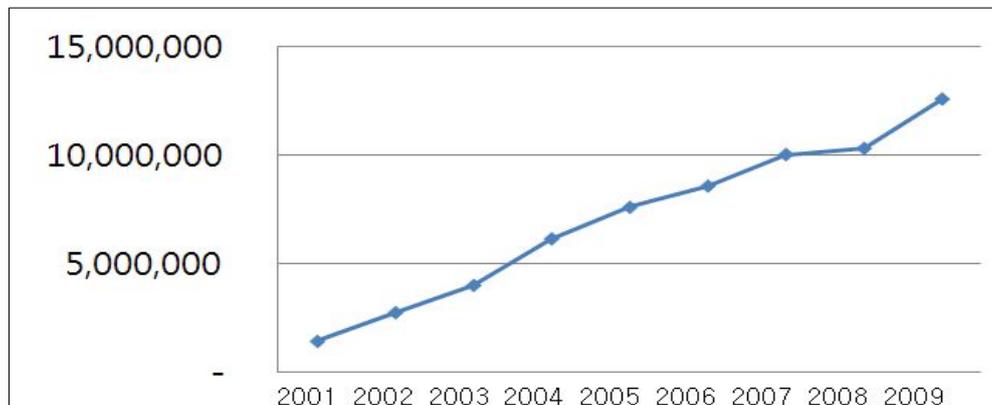
(단위: 천원)

년도	자활근로 사업수		
	사업수	참여인원	매출액
2001	23	312	1,437,769
2002	47	543	2,761,811
2003	51	575	4,011,826
2004	61	756	6,153,373
2005	67	960	7,601,923
2006	74	1,025	8,581,176
2007	76	1,144	10,030,678
2008	76	1,113	10,315,767
2009	85	1,399	12,582,792
2010	93	1,318	13,681,780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그림 5-2> 2001~2009년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2001~2010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수, 참여인원,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5개였던 사업 수가 2010년 33개로 6.6배가 증가하였고 참여인원은 72명에서 447명으로 6.21배가 증가하였다. 매출액의 경우 2007년 최초 347,657천원에서 2009년 3,151,043천원으로 9.06배가 증가하였다.

<표 5-3> 2001~2010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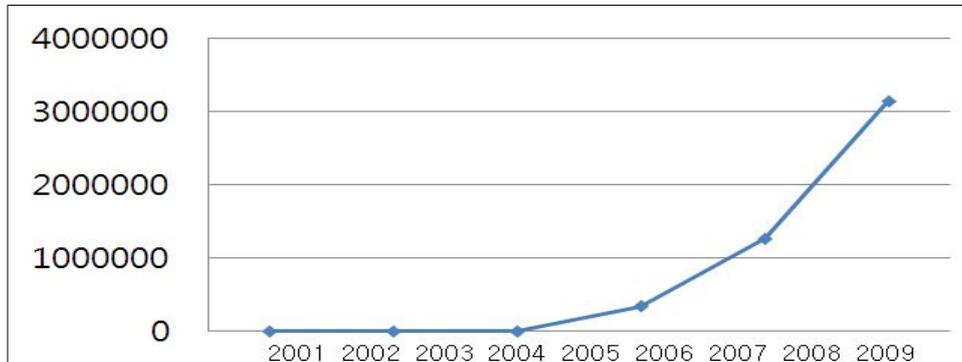
(단위: 천원)

년도	사회서비스사업		
	사업수	참여인원	매출액
2004	5	72	-
2005	6	138	-
2006	6	217	-
2007	23	278	347,657
2008	29	352	1,268,103
2009	27	443	3,151,043
2010(6월현재)	37	447	2,141,910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그림 5-3> 2001~2009년 사회서비스 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2010. 6. 30. 기준.

2001~2010년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수, 종사자수, 센터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2010년을 각각 비교해보면, 센터수의 경우 7개에서 11개로 1.57배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51명에서 152명으로 2.98배, 센터예산은 1.72배 증가하였다.

<표 5-4> 2001~2010년 지역자활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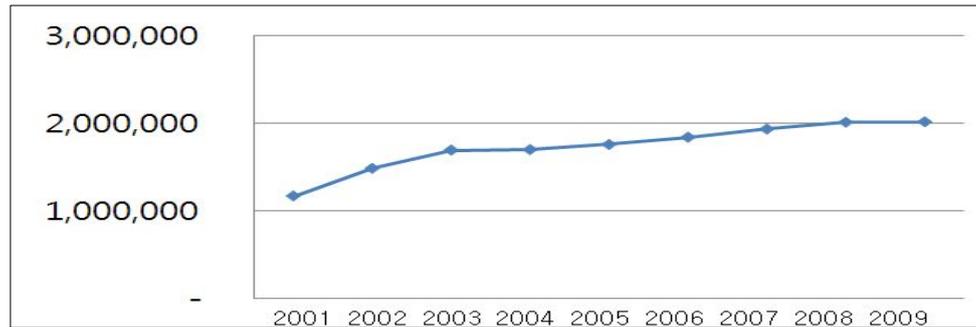
(단위: 천원)

년도	지역자활센터		
	센터수	종사자수	센터예산
2001	7	51	1,174,000
2002	10	66	1,490,045
2003	11	70	1,699,000
2004	11	77	1,705,191
2005	11	86	1,763,219
2006	11	89	1,846,553
2007	11	92	1,940,127
2008	11	97	2,017,536
2009	11	107	2,022,650
2010	11	114(152) ⁹⁾	2,024,764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그림 5-4> 2001~2009년 지역자활센터 예산 추이

(단위: 천원)



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6. 30. 기준

9)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수는 114명으로 내부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복지-고용사례관리사업 등의 담당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1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자활성공률

마지막으로 인천 8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공률¹⁰⁾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활성공률은 현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활근로참여자 수에 대한 자활성공유형의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text{자활성공률} = \text{자활성공유형(창업, 취업, 자활특례, 탈수급)} / \text{자활근로참여자 수}$$

먼저 2005년도의 경우, 평균 8%의 자활성공률을 보였으나 2006년 11%, 2007년 16%, 2008년 20% 그리고 2009년 가장 높은 28%의 자활성공률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D센터의 경우, 2009년도에 절반에 가까운 47%의 자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표 5-5> 센터별 자활 성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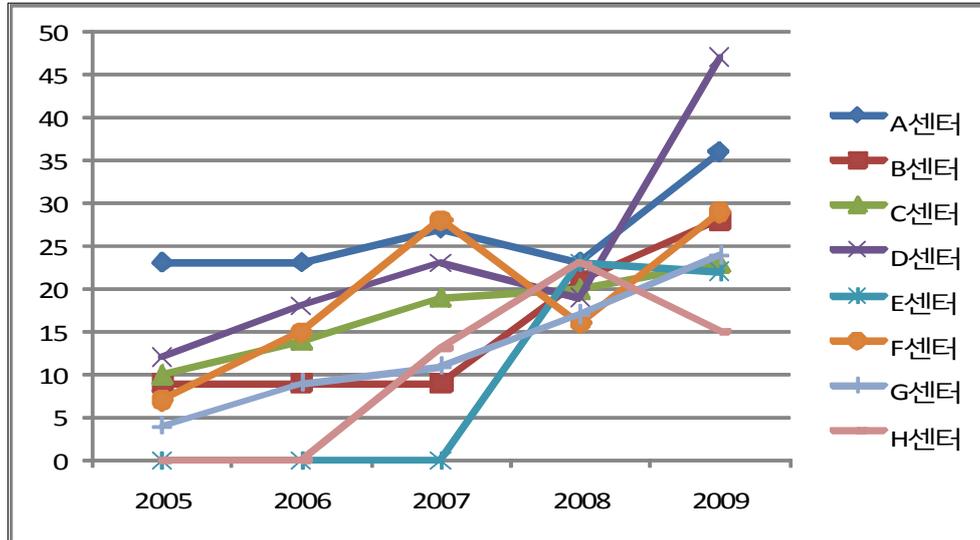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활 성공률a)	A센터	23	23	27	23	36
	B센터	9	9	9	21	28
	C센터	10	14	19	20	23
	D센터	12	18	23	19	47
	E센터	-	-	-	23	22
	F센터	7	15	28	16	29
	G센터	4	9	11	17	24
	H센터	-	-	13	23	15
	평균	8	11	16	20	28

자료: 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및 8개 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각년도.

10) 자활성공률은 인천의 11개 센터 중 자료가 수합된 8개 센터의 자료만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5-5> 센터별 자활 성공률 추이(2005년~2009년)

(단위: %)



제2절 질적 측면의 성과

인천지역자활사업의 질적 측면의 성과는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자활의욕, 자활사업 참여이후의 생활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질적측면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참여자 인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일부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조사¹¹⁾의 결과를 첨가하였다.

11) 지역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지역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인식조사의 결과를 강조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시점은 2010년 12월 3일 A구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는 4명으로 집단면접의 형식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보조적 조사성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면접조사는 1개 센터의 여성참여자만으로 이루어진 조사대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고, 질적성파로 표현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추출하였다.

1. 자활사업 만족 및 도움정도

자활사업 만족도 및 도움정도와 관련해, 먼저 자활사업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이 32%, 불만족이 16%로 만족이 불만족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움정도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된다가 32%,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1.6%로 역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활사업을 통한 만족 및 도움정도와 관련해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먼저 자활사업 참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동료 간의 위로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참여자1: “**심적인 안정감을** 찾은 게. 너무 다 어렵게 있다 왔기 때문에 서로 **기댈 수 있는 공간** 공유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심적인 안정을 찾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참여자2: “또 동료들 보면 참 우울한 상태로 오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고. 다 몇 년 전에 겪었던 상황**이잖아요. 같이 또 생각나서 또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풀어지고 여기 오면 참 오기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참여자4: "이런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같고. 소외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센터에 오니까 다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처럼 힘들고 고생한 사람

<면접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유형	가족구성	참여사업	참여기간
참여자1	여	40	전문대졸	조건부수급자	자녀2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4년
참여자2	여	49	고졸	조건부수급자	자녀2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3년2개월
참여자3	여	40	전문대졸	조건부수급자	자녀3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2년4개월
참여자4	여	41	고졸	조건부수급자	배우자, 자녀2명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2년3개월

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같이 힘들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위로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회사 내 직장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적응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참여자1: “자활이 사회의 또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고 순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기술이 없이 일반 사회에 나가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3: “**자활 안에서 인간관계를 성공하면 사회 나가서 100% 성공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살아가려는 열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뭉쳐있는 것인데 여기는 거의 자포자기인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가 잘 이뤄지면 그 안에서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2. 자활의욕

자활사업 참여이후 자활의욕과 관련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돈의 소중함의 증대와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6.1%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 4.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과 관련해서도 그렇다가 65.7%로, 아니다 4.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의 경우도 그렇다가 61.8%로, 아니다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항목들 역시 자활의욕과 관련해,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받은 보수의 적절함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아니다가 45.4%로 그렇다 17.9%보다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5-6> 자활의욕정도

(단위: %)

구 분	아니다	보통	그렇다
지금 하는 일이 내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N=456)	15.1	49.1	35.8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소중한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N=457)	4.4	19.5	76.1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다.(N=455)	8.8	41.1	50.1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내게 중요해졌다. (N=455)	10.5	34.1	55.4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N=452)	4.2	30.1	65.7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N=456)	9.6	28.5	61.8
일하는 목표가 명확해졌다.(N=451)	11.8	38.8	49.5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다.(N=453)	13	54.3	45.7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N=454)	26.7	32.2	41.2
일해서 받은 보수가 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N=452)	45.4	36.7	17.9
취업, 창업 준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N=452)	20.8	42.7	36.5

한편 자활의욕과 관련한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특히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음을 참여자는 언급하고 있다. 다만, 교육의 내용이 취·창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것보다는, 자활의 의지를 키울 수 있는 인성적 차원의 교육이 더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참여자2: “여기 교육이 대부분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보다는, 진짜 물론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필요한 게 그거이기는 하거든요. 인성이나 자아를 찾고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믿고, 그런 교육을 매년 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4: “이 센터가 교육이나 그런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나 자활참여자들은 앞서 설문조사에서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재,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참여자 2의 경우,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수급가정으로, 탈수급 이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2: “저희는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은 저희는 정부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자예요. 제가 그거를 우리는 최소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거를 느껴서, **저희들도 근로자로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참여자4: “직장처럼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고 어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안되더라고 **산재나 고용보험은 해주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거는 되야 하지 않나.** 솔직히 사회적 일자리에서 있다가 그만 두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시장형은 자립 준비금이니 뭐 그것도 나중에 직장을 취직해야 받는 거지만 사회적 일자리 뭐 그런데서 일하다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계적인 거를 만들어서 직장화가 되었으면...”

참여자2: “**저희가 여기서 자활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해도 자녀는 어느 정도 학비를.** 여자가 혼자 직장생활해서 자녀를 키운 다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대학을 보내기란. 아이가 공부 잘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좋은데. 아이한테 그런 거를 다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3.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인생에 대한 계획, 목표를 세우게 됨과 관련해, 그렇다가 42.5%로 아니다 1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의 경우 그렇다가 37.5%로 아니다 12.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기타 다른 항목들 역시 생활변화와 관련해, 그렇다가 아니다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7>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

(단위: %)

구 분	아니다	보통	그렇다
나도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했다.(N=451)	20.2	46.6	33.2
집안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N=456)	21.5	49.8	28.7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N=447)	12.8	53.5	33.8
친구, 동료, 이웃과 관계가 좋아졌다.(N=451)	10	54.3	35.7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N=448)	12.7	49.8	37.5
인생에 대한 계획,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N=454)	13.2	44.3	42.5

한편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 정도와 관련해 면접조사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 2의 경우,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붙었고, 집안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학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고 무엇보다 이러한 목표가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 2: “팀원들도 삼년 내내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때는 참 소심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거든요. 믿을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럴 때 내가 많이 컸구나. 이 반장역할 하면서. 교육 받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려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이 (밖으로)나와서 하니까 더 자신 있고, 아이들한테 심지어 딸은 엄마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런 말을….”

참여자 2: “여기 있다 보니까 공부하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확산이 되었어요. 내년엔 대학을 7명이 더 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참여자 3은 자활사업 참여를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기회로 여겨,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한 깊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 3은 스스로를 위한 자활의 동기를 넘어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가 이웃에 대한 관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여자 3: “저는 2년 정도 있으면서 가장 큰 소득은 안면으로 많은 사람을 얻었는데 정말 내 마음과 그 사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을 얻었어요.”

참여자 3: “내가 능력이 되면 나도 베풀어야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또 돌려주고 싶어요. 그런 거를 하고 싶고. 자활에 100명, 200명이 있다면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지금은 힘이 들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나한테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거든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이 되는 정도를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자활의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에 대한 태도와 돈을 버는 것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의 변화에서는 가족간의 관계, 친구·동료·이웃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제3절 소결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는 양적측면의 성과와 질적측면의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측면의 성과는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양적인 성장, 그리고 자활 성공률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자활사업의 양적인 성장은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의 약 10년간의 각 사업의 성장추이이다.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들의 운영현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사업수는 2001년-2009년까지 5.6배, 참여인원은 8.8배, 매출액은 105.8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자활근로 역시 사업수는 약4.1배, 참여자는 4.2배, 매출액 또한 8.6배 늘었다. 사회서비스사업은 사업수는 6.6배 증가, 참여인원은 6.2배 증가, 매출액은 2007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약9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자활사업의 추진기반인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과 비교해보면, 센터수는 7개에서 11개로 확대되었고, 종사자수는 약 2.98배, 센터 예산은 1.72배 늘었다.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자활성공률은 8개 지역자활센터의 최근 5년간의 자활성공률을 비교해본 결과, 2005년에는 평균 8%의 자활성공률에서 2009년에는 28%의 자활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자활사업에 대한 경제적 성과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과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지역자활사업의 질적 측면의 성과는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의 인식조사 결과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의 결과에서 도출하였고,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질적 측면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자활사업의 만족 및 도움 정도이며, 둘째는 자활의욕, 셋째는 자활사업 참여 후 생활변화이다.

제6장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개선방안

제1절 지역자활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제2절 지역자활사업의 추진기관별 역할 재정립



제6장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개선방안

제1절 지역자활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 지역자활사업의 변화에 따른 방안

1) 자립촉진이 가능한 ‘세분화·전문화’ 된 사업내용으로 개편

지역자활사업은 지난 15년간 많은 정책적 변화와 사업의 확대 그리고 참여자의 변화가 있어왔다. 초기에는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참여자에 있어서도 자활근로 등이 수급권자 중심이라면 사회서비스사업은 상대적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시민들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아닌 저소득시민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의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수급자 비율은 57.1%, 차상위계층과 일반저소득시민의 비율은 42.9%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전국 비교에서 비교적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고(중앙자활센터, 2010), 사회서비스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수급자 비율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81.0%이지만 사회서비스사업에서 수급자 비율은 22.6%로 낮고, 대신 차상위계층 및 일반저소득시민이 77.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활사업의 내용은 주로 사업단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취업지원활동과 자활공동체 외의 창업지원 활동은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사업내용이 다양화되지 못하는 점과 전문적 교육, 심도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자활사업 전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들을 분석해보면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공동체의 업종은 여전히 5대 표준화사업의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취업 및 창업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땅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34.1%에 이를 정도로 사업내용을 통한 기술습득, 직업훈련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조건 만족도에서는 ‘기능교육’은 5점 만점에 2.88점으로 ‘급여’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면접조사에서도 전문성 있는 사업내용, 교육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2: “교육이라는게 사실은 여기가 좀 부족해요. 우리를 자활해서 내보내려면, 어떠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도 센터에 그런거를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하면 항상 기초만 해요..... 어디를 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발판이 안되고.. 혼자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중략).. 허울만 있지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 아니다... 여기서 탈출해나가면 스스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약간 부족해요.”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창업지원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지원부분은 개별 지역자활센터 차원, 또는 종사자 차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광역단위의 교육, 사업개발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인천지역자활센터가 주축이 되는 광역단위 교육과정 개발, 인천지역이 선도적으로 주도해 왔던 지역자활센터들간의 공동사업단 사업 발굴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모든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직업 및 진로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해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근로유인이 가능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재 필요

지역자활사업은 일당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것은 경력이나 사업성과 그리고 노력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참여

자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능력을 배양하거나, 사업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주요한 일자리 사업들은 경력과 사업성과 그리고 노력에 따라 근로소득이 차별화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실현된 수익을 그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노대명, 2010).

참여자 1: “자활에 온다는게 저뿐만이 아니라 선택해서 여기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권했는데 일당이 2만6천원이라는데 정말 오고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정규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나도 우리 애들하고 살고.. 그래서 못간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분이 계속 권하더라고요.”

즉, 근로유인을 위한 현금과 현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에는 탈수급을 유인하지 못하는 형태로 지역자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업수급자에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지원, 주거관련 서비스, 아동보육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유인 기제로 활용하도록 한다. 근로유인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일정 정도의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요구된다.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급여삭감이나 기타 복지제도에 대한 수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근로사업은 프로그램의 참여기간 제한이 없어 특히 ‘저임금형 안정적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이인재, 2010),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의 제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여자 4: “사업단 안에서 안주하게 되는 그런거 있잖아요. 불안한 거.. 당장 나가면 내가 무슨일을 해야 할지 지금 일하고 있지만 그 일을 살려서 실제 밖에 나가서 사실상 일하기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데 두려운거랑, 있다 보니까 누리는 거..”

3) 자활사례관리능력 증진

먼저 자활근로에 있어서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전망을 수립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현행의 자활근로 참여 이전단계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로 설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근로 단계별 구분을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자활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는 윈-스타트 사업을 개발하여 취업지원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국가 차원에서는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성과관리형 자활사례관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천 지역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시범사업 지역이면서, 윈-스타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인천형 자활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011년에 사업이 종료되므로 사업평가를 통하여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이어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인천광역센터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시범사업 기관이므로 이후 지역자활센터들에서도 성과관리형 자활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활사례관리능력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쟁점은 자활사례관리 전담직원을 두는 것이며, 자활사례관리 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에 대한 것이다. 유태균(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자활사례관리의 주요 어려움으로 자원개발과 연계부분에서는 ‘지역사회 자원개발이 어려워 참여자 욕구에 적합한 지역자원 연계가 용이하지 않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에게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파악이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자활사례관리 전담 직원의 경력에 대해 특성과 욕구를 올바르게 파악하는데에는 4-5년의 경력이, 초기면접을 담당하는데에는 5-1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의 열악한 인력과 재정구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등의 현황으로 볼 때 자활사례관리의 내용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자활지원이 가능하다.

4) 지역자활사업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병행

자활사업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종사자 조사결과에 있는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은 낮다. ‘고용안정과 신분보장’, ‘임금인상’ 등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임을 기억할 때 종사자들이 이직하지 않고 보람을 갖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신입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확대하여 모든 자활종사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의 지역자활사업의 역사는 자활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그 정신은 계승해야 하지만 이제는 지역자활사업이 체계를 갖추고 종사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로서 기능해야 한다.

2. 거시정책 변화에 따른 방안

1) 지역자활사업 성과관리 개선

자활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며, 성과를 재정의하는 과정속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주 참여자들은 수급권자들로 구성이 되었고, 이는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자발적 참여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수급자에게서 강한 자활의지와 노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자활기관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급자들이 탈수급과 탈빈곤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발적 근로의지가 약하고, 탈수급 탈빈곤의 성과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활기관이라는 지원주체의 헌신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이문국 외, 2010).

자활사업의 성과가 비단 자활성공률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자활수행 기관

들의 사업목표의 달성, 과정에 대한 평가, 자활참여자들의 인식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같은 다각적 평가로 거론되어야 한다.¹²⁾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지자체와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관계 하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상담에 기반하여 개인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통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예산지원을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계약방식을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을 취하였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노옥, 2010). 이러한 사례관리방법에 기반한 자활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것이 또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기업과의 상생

사회적 기업의 출현은 지역자활사업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자활사업의 역사속에서 태동되었다. 제도화된 것은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기반하며, 2009년 9월 기준으로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251개이며, 이중에서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62개로 사회적기업의 24.7%를 차지한다. 인천은 동구의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과 중구의 ‘(주)청소사랑’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주요 이유로는 ‘공신력 제고’¹³⁾로 알려지고 있다(자활정책연구소, 2009).

12) 정부는 자활사업의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를 구분하여 정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지역자활센터의 평가는 참여자수, 취창업, 탈빈곤을 모두 센터에 묻고 있으나 취창업은 참여자의 의지와 정부의 노력, 노동시장 환경과 가족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므로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와 책임까지 떠맡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고경환, 2010).

13)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2009)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35개의 자활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주요이유로 48.6%가 ‘공신력 제고’를 들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후의 변화로는 ‘공신력 제고’, ‘구성원들의 자긍심 증가’로 조사되었다.

인천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조사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 진출을 위한 사전 교육’에 대한 욕구가 1순위의 응답에서는 세번째로, 2순위 응답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났으며, ‘지역자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도 ‘사회적 기업 설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준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제2절 지역자활사업의 추진기관별 역할 재정립

1. 군구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사업의 최종의 전달체계로서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의 욕구에 기반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함께 자활과 자립을 원조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참여자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수는 여성이며, 또한 다수는 여성한부모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거, 돌봄과 같은 다양한 복지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능교육과 사례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업이 특정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들은 대체로 입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자활정책연구소, 2009).

따라서 인근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인근 지자체 등과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은 공동사업단 사업이 활발하였고 네트워크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

화는 이러한 공동사업이 다소 주춤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들이 초기에 가졌던 공동사업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적 형태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자활사업 내부의 역할다지기와 연계에 힘써왔다면, 이제는 자활사업 외부와의 네트워크 확대와 강화를 통한 자원개발에 보다 많은 조직적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은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운영지원위원회는 지역사회주민대표, 참여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지역사업, 복지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기타 기관운영에 대한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지원위원회는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저조하다. 따라서 운영지원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은 자활사업에 있어서 공동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광역공동체, 공동사업단, 네트워크 회의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공동사업은 그 자체의 사업뿐 아니라 개별 사업들에도 시너지 효과를 주고,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한 자활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업무과중과 연대의 방식에 대한 센터별 갈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인천이 향후에도 자활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동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변화를 꾀함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는 공동사업단, 광역공동체, 네트워크회의와 같은 공동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연구, 홍보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자활사업을 위한 자원을 구축하고 연계해야 한다. 업종별 DB구축과 함께 인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조사와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 회계, 홍보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자활사업의 생산품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차원의 자활시장을 조직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권역별 활동을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자활사업들이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킬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광역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시·군·구와의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내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자활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인천광역시, 군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복지부문 이외의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광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인천광역시와 군·구

지역자활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주요사업은 첫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둘째,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셋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과 자활근로사업비 중 일부예산의 보조, 넷째, 자활공동체 인정, 다섯째,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이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자활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활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의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의 원-스타트업과 같은 시 차원의 지역자활사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하고,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시범사업 종료 이후의 평가와 지속사업으로 전환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군구 차원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지원으로만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자활기금의 마련과 함께 지역의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자활사업은 국비가 주 재원인 중앙정부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군·구의 관심과 지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시를 비롯한 군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활사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 이를 통한 수요확대만이 향후 자활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중앙정부와 중앙지원기관

1) 중앙정부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을 현행의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하는 조건부수급자¹⁴⁾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취업수급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저소득시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건부수급자 규정은 가장 중요한 자활지원대상자라 할 수 있는 수급 취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활사업 대상을 부적절하게 협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수급자를 지역자활사업의 주요 참여자로 포함하고, 조건부과제외자나 조건부과유예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구인회, 2010).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교육과 노동이 동시에 진행되며, 여기서 창업을 도모해야 한다. 만약 자활사업단에의 참여를 중단할 경우 탈빈곤을 위한 다른 단계나 경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주로 자신의 자구적 노력으로 탈빈곤을 위한 경제 행위를 해야 한다(김정원,

14) 조건부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대 초반의 규모를 차지할 뿐으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매우 소수만이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고 있고, 그 외의 대다수 근로능력 수급자, 특히 취업수급자는 조건부과제외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다(구인회, 2010).

2008). 특히 창업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한 것인지를 제고해야 한다.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창업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이 취약한 이들에게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애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고 취업이 가능한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성이 매우 높은 사업, 예를 들면 지역자활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마이크로크레딧은 일자리 사업들과 보다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적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자활정책연구소, 2009).

무엇보다도 자활지원 전달체계의 통합적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취업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노동부 자활사업에서는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문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형 시범사업과 노동부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구인회, 2010).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서 분리되어 있는 기초보장업무와 자활지원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중앙자활센터 ·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지원체계의 총괄 조정 및 자활사업 참여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기관이다.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2001년 사단법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로 출발하였으며, 조직사업, 교육사업,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자활센터와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기능을 해야 한다. 중앙자활센터는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평가와는 별도로 자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여 인천광역시와 같은 광역차원에서의 자활제도의 결과와 문제점을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김태완·전지현, 2009).

지역자활사업의 참여자와 종사자의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인증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종사자재교육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재교육 체계등을 참고하여 종사자재교육에 대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시스템을 조직하여 중앙단위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병구, 이상훈(2002),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고경환(2010),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토론문 “자활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할때”, 자활사업15년 협회창립10주년 기념사업 대토론회,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 고경환 외(2009),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
- 구인회(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1).
- 권용신(2009), “자활서비스 질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 김미연(2006),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 실태와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 황성철, 이재연, 변용찬, 김안나, 조홍식, 김태완, 신현웅, 김영민, 류만희, 권선진, 이주열, 이상은, 조애저, 김유경, 김상철, 조윤화,(2008),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원(2007),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사례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 김진구(2007), “경기지역 고령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립전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6.
- 김태완·전지현(2009), “자활전달체계 개편과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8호.
- 노대명(2006), ‘자활사업,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터뷰 내용,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좌담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노대명, 강병구, 강석훈, 홍경준, 최승아, 원일(2006), “2005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경(2004), “인천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2010), ‘2010년도 자활사업안내’.
- _____ (2009), ‘2009년도 보건복지백서’.
- 손능수(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3).
- 신동면(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문국(2009), “2009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의 문제점과 대안”, 복지동향.

이문국·김승오·노대명·김정원(2010)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자활사업 15년 협회창립 10주년 기념사업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상록·진재문(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권.

이석원·정희정(2007),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 분석 -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이영환, 강남식, 김진구, 이문국, 장기성, 정원오(2005),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2010), 2010년 6월 현재 내부자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2010a), 인천지역자활사업 10주년 백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_____(2010b), 2010년 6월 현재 내부자료.

인천 11개 지역자활센터(2010), 2010년 6월 현재 내부자료.

임동진(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전재욱(2008),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부산지역 시장진입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학위 논문.

정민숙(2004), “자활사업 참여자의 서비스 욕구와 만족도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개입방안”,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정원오·김진구(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최윤정(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홍완표(2004),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신문기사〉

동아일보 2010. 9. 9. 일자

〈홈페이지〉

희망리본프로젝트: hoperibbon.or.kr

주) 온케어: www.socialserviceventure.or.kr

[Abstract]

Improvement Measures and Their Achievements on the Incheon Self-Support Project

Hyun-Jin Kwon, Gi-Deok An

The Self-Support Project started with the Self-Support Assistance Center Project in 1996 and the Fundamental Assistance For Living Act enacted in 2000. Currently 242 local self-support centers are running across the nation. In this study, based on 11 self-support centers located in Incheon, its 10 yea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re examin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or its development.

For this, the birth and change of the self-support project and its contents and execution system are investigated and the history of the self-support project and the activities of relevant organizations in Incheon are analyzed. Along with thi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463 participants in the self-support project and 122 workers for self-support centers in Incheon about local self-support project is conducted. Additionally, the achievements made by them are analyzed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Through this, first, measures to cope with change of environment of the local self-support project and second,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that

each relevant organization has are suggested respectively. And the details of those suggestions include subdivis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project, incentives and restrictions, increase in administrative capability, enhancement of managing performances, strengthening of ability of participants and better treatment and connection between the local self-support project and social corporation. And suggestions are made regarding the roles of local self-support centers, the self-support center association in Incheon, the Incheon self-support center, Incheon City and its districts and counti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assistance organizations.

부 록

1. 인천광역시 지역자활사업 지원 조례
2.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지
3.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설문지



〈부록 1〉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 2010-04-26 조례 제 4419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함은 보장기관 혹은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의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 및 다음 년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년도 및 다음 년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년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광역자활센터)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4-26 조례 제 4419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지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자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의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권현진 연구위원 : 032-260-2692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몇 년 몇 월부터 참여하였습니까?

☞ 참여한 년·월을 적어 주세요. (_____ 년 _____ 월)

13. 귀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얼마동안 실업상태로 있었습니까?

①1년 이하 ②2년 이하 ③3년 이하 ④4년 이하 ⑤5년 이하 ⑥5년 이상

14.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외에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14-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14번으로 가세요)

14-1. 지금까지 참여한 자활사업에 참여한 총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 현재 참여자활사업 포함, 약(_____)년간

15.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 ②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 ③ 창업을 위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 ④ 사회참여(소속감)를 위해서
- ⑤ 기타:(_____)

16.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16-1번으로) ② 조금 불만족(16-1번으로)
- ③ 보통 ④ 조금 만족 ⑤ 매우 만족

16-1.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7. 자활사업이 귀하의 자활·자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Ⅲ. 다음은 자활의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다음 문항은 귀하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이전과 비교해서,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지금 하는 일이 내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3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4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내게 중요해졌다					
5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6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7	일하는 목표가 명확해졌다					
8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다					
9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0	일해서 받은 보수가 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1	취업, 창업 준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IV. 다음은 근로조건과 기관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다음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정도를 해당 칸에 각각 V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급여					
2	노동시간					
3	노동강도(힘든 정도)					
4	노동환경(작업장 환경)					
5	기능교육					
6	전반적인 만족					

22. 다음의 기관운영에 대한 만족정도를 해당칸에 각각 V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직원은 귀하께 정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한다					
2	자활사업을 하면서 내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3	직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4	직원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제공해 준다					
5	내가 속해있는 사업팀의 담당은 나에게 성의껏 자주 상담을 해준다					
6	내가 속해있는 사업팀은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다					
7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부록 3>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설문지

지역자활사업 종사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자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의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권현진 연구위원 : 032-260-2692

9. 귀하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8시간 이하 ②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③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④ 12시간 이상

10. 귀하가 담당하는 사업단(자활공동체 포함)의 수는 얼마입니까?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⑥ 5개 이상

II. 다음은 직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은 직무내용에 대한 중요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무내용	①전혀중요 하지않음	②중요하 지않음	③보통	④중요	⑤매우 중요
1) 사업단 및 현장 관리					
2) 지역사회 자원 연계관련 업무					
3) 지역 네트워크 관련 활동					
4) 상담 및 사례관리					
5) 자활관련 교육 업무					
6)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					
7) 기타()					

12. 다음은 직무의 수행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무내용	거의 수행않음	<-----보통----->			매우많이 수행
		②	③	④	
1) 사업단 및 현장 관리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사회 자원 연계관련 업무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네트워크 관련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상담 및 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5) 자활관련 교육 업무	①	②	③	④	⑤
6) 회계·사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①	②	③	④	⑤

IDI연구보고서 2010-23

인천 지역자활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발 행 인 김 민 배

발 행 일 2010년 12월

발 행 처 인천발전연구원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di.re.kr>

인 쇄 소 032디자인(주) T.(032) 7777-032

© 인천발전연구원 2010

ISBN 978-89-5678-306-2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